



# 비핵·개방·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 홍익표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7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02-2272-1767)

인 쇄 처 양동문화사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 조명철, 홍익표 [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9-17-05)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536-5 93340 : ₩7,000

북핵 문제[北核問題]

한반도 비핵화[韓半島非核化]

남북 경제 공동체[南北經濟共同體]

349.11-KDC4

327.519-DDC21

CIP2009004217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통일연구원
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북한대학원대학교
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여 인 곤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팀장)	박 종 철 선임연구위원 조 민 선임연구위원 함 택 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조 명 철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금 순 선임연구위원 장 의 관 교수(통일교육원) 강 동 완 책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박 종 철 선임연구위원	전 현 준 선임연구위원 최 진 욱 선임연구위원 홍 우 택 부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조 민 선임연구위원	전 성 훈 선임연구위원 정 영 태 선임연구위원 허 문 영 선임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함 택 영 교수	구 갑 우 교수 이 수 형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 승 열 연구위원(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 명 철 선임연구위원	홍 의 표 전문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이 금 순 선임연구위원	고 성 호 교수(통일교육원) 안 해 영 조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 해 경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목차

C o n t e n t s

##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홍익표

### 제 1 장 서론 / 1

### 제 2 장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01 북한경제 현황 및 평가	가. 경제	6
	나. 재정	17
	다. 인프라	23
02 남북경협 현황 및 평가	가. 남북교역	32
	나. 대북투자	35
	다. 3대 경협사업	37
03 '상생공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가. 남북경제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협력	42
	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개발의 필요성	44

### 제 3 장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01 '비핵·개방·3000 구상'의 주요 내용	가.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개념 및 목표	50
	나. 5대 중점 프로젝트	53
0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내용	가. 경제공동체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56
	나. 경제통합의 유형	60
	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성격	62
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지위와 역할		

## 제 4장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0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72
02 주요 수단 및 내용	가. 정치적 수단	77
	나. 경제적 수단	80
	다. 사회·문화적 수단	81
3.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본구도		83

## 제 5장 남북경제공동체 단계별 추진방안

01 핵폐기 합의단계: 남북경협이 정상적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가. 경제	90
	나. 재정	93
	다. 인프라	97
02 핵폐기 이행단계: 남북경협의 양적·질적 확대	가. 경제	101
	나. 재정	105
	다. 인프라	107
03 핵폐기 완료단계: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	가. 경제	110
	나. 재정	114
	다. 인프라	116

## 참고문헌 / 119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23

〈표 II-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8
〈표 II-2〉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9
〈표 II-3〉 북한의 10대 무역대상국	2
〈표 II-4〉 북한·중국·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15
〈표 II-5〉 북한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구성비, 1980~2001년	19
〈표 II-6〉 재정수입 제도의 변화	21
〈표 II-7〉 북한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구성비, 2003~2007년	22
〈표 II-8〉 남북한의 1차 에너지 총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23
〈표 II-9〉 북한 에너지난의 원인	25
〈표 II-10〉 북한의 주요 고속도로 현황	30
〈표 II-11〉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31
〈표 II-12〉 남북교역의 품목별 반입 현황	33
〈표 II-13〉 남북교역의 품목별 반출 현황	34
〈표 II-14〉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39
〈표 II-15〉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구간	41
〈표 III-1〉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중점프로젝트	56
〈표 III-2〉 경제통합의 단계	59
〈표 III-3〉 경제통합의 유형	60
〈표 III-4〉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의 단계적 추진	68
〈표 IV-1〉 남북경제공동체 단계별 추진시 고려사항	87
〈표 V-1〉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93
〈표 V-2〉 향후 10년간 국제협력자금 조성 규모(추정치)	94
〈표 V-3〉 세계은행의 비회원국 특별신탁기금 운용 사례	106
〈표 V-4〉 한일 수교자금을 기초한 북일 수교자금 추정	115

〈그림 II-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11
〈그림 II-2〉 북한의 품목별 수출비중	13
〈그림 II-3〉 북한의 품목별 수입 비중	14
〈그림 II-4〉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현황	24
〈그림 II-5〉 북한의 주요 철도망	27
〈그림 II-6〉 남북교역 추이	32
〈그림 II-7〉 연도별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현황	36
〈그림 II-8〉 금강산 관광객 추이	40
〈그림 III-1〉 경제공동체 형성 과정	65
〈그림 IV-1〉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및 단계 설정	85
〈그림 V-1〉 제1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100
〈그림 V-2〉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별 중심도시 현황	102
〈그림 V-3〉 제2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109
〈그림 V-4〉 제3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118



# 제1장

## 서론

비핵 · 개방 · 3000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 제1장

## 서론

남북경제공동체는 남과 북 각 지역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을 직접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정은 북한경제의 적극적 재건과 동시에 남한경제의 재도약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현실적으로 ▲이질적인 경제체제(경제제도와 관리시스템)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정이고, ▲경제력 수준이 현격히 차이 나는 두 지역의 경제를 통합해야 하는 과정이며, ▲경제이념과 정책도 완전히 다른 두 지역 정부의 정책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제약요인과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형태가 아닌 유럽연합(EU)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파급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인 통합까지 추구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간의 제도적(institutional) 합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형성되는 기능적(functional) 형태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상호간 경제협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력 격차나 체제상의 이질감 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추진은 남북관계의 수준, 한반도의 주변정세 및 대외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협력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적 추진전략은 시기별로 추진되어야 할 협력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남북한이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른 각자의 준비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계별 전략에 기초하여 남북경제공동체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의 공동발전과 공존·공영, 나아가 궁극적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3가지 조건, 즉 ‘국민적 합의,’ ‘북한의 의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적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남북관계 발전이 한국민의 경제적 삶에 실질적으로 유용하다는 ‘호혜적’ 구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즉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일환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구상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실질적 변화의지가 전제된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필요하며, 한국의 일방적 지원이 북한정권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현상변경은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직결됨으로 반드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사업의 4원칙을 제시하였다. 대북사업 4대 원칙은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에 따른 대북사업의 추진이다. 호혜적 교류·협력은 일방적 지원과 양보가 아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를 지향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내재된 화해·협력의 정신을 상생·공영으로 확대·발전시키고(2008. 3. 26, 통일부 업무보고 시),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서 나온 것이 ‘비핵·개방·3000 구상’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판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목표를 ‘비핵’을 통한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과 ‘개방·3000’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의한 평화통일 기반 확충으로 설정하였다. ‘비핵’은 ‘상생’의 정책수단이며, ‘개방·3000’은 ‘공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특히 ‘호혜적 경제관계’의 형성 없는 경제공동체는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에 북한이 남북경협을 남측으로부터 단순히 무엇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으로만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해 하는 과정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실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과 접근방법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부에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책추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

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점에서, 이 구상에 대한 북측의 이해와 한국사회의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부분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비핵·개방·3000’의 추진 전략과 세부 실행 프로젝트,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모색,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장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 제2장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 1. 북한경제 현황 및 평가

#### 가. 경제

##### (1) 대내 경제

북한은 1990년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하였다. 북한 당국이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목표를 추진했던 제3차 7개년 계획(1987-93)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패로 끝났다.<sup>1)</sup> 동 계획이 실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 시장이라는 보완물이 사라진 가운데 북한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 및 원부자재 확보의 어려움과 무역의 취약성, 북한 경제의 외연적 확장의 한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한<sup>2)</sup> 북한 당국은 이후 2~3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경제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전략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1994~97년 동안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아사(餓死)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듯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격적인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실질성장률 기준)을 기록하

1) 북한 당국은 3차 7개년계획기간 중 국민소득을 기초연도보다 1.7배(연평균 7.9% 성장)로 늘린다는 성장목표를 제시했지만, 연평균 -1.7%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계획종료시점인 1993년도의 경제규모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초연도의 8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1994).

2) 1993년 12월 8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전원회의는 북한 역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 제국주의 세력의 반사회주의 공세라는 외적 요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했지만, 북한 당국이 경제계획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로동신문』, 1993년 12월 9일.

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GDP는 30% 이상 감소하였다.

계속된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식량을 비롯해 소비품에 대한 중앙공급체계(배급제)의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었다.<sup>3)</sup> 심각한 경제위기는 계획경제 시스템의 작동 불능 상태를 초래하였는데, 경제난에 따른 원자재의 부족 심화 및 자재공급의 불안정성 심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원자재 공급체계가 파괴됨에 따라 계획경제체계 전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1990년 후반 이후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 당국도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북한 당국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차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강국 건설’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즉, 북한은 사상 및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은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현 시점에서 강성대국 건설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경제강국의 건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핵심 명제로서 국방공업 우선 발전 및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은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거기에 선차적 힘을 쏟으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동시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투자에서 국방공업의 몫을 충분히 조성하고 여기에 설비, 자재, 전력, 노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 앞세운다는 것을 말한다.<sup>5)</sup>

이러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은 종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종전의 사회주의경제건설 기본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따라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

3) 1990년대 초부터 식량배급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배급의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곧이어 식량 배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1994~95년부터는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4) 박명혁,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2003년 3호(2003), p. 9.

5)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21.

6) 북한은 국방공업과 중공업의 관계에 대해 “중공업은 국방공업의 기초이며 중공업의 발전을 떠나서는 국방공업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면서, 중공업이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밀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로

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은 종전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기본노선과 구별되는 별개의 노선이 아니다.<sup>7)</sup>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국방공업 중심의 경제건설노선을 주창하게 된 배경은 북미관계 악화 등에 따른 외부환경 악화를 주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sup>8)</sup>

<표 II-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북한 공식통계	0.5	0.1	3.2	3.9	3.2	7.7	4	-	-	-	-
UN 추정치	-1.1	6.2	1.3	3.7	1.2	1.8	0	0.9	0.4	-	-
한국은행 추정치	-1.1	6.2	1.3	3.7	1.2	1.8	2.2	3.8	-1.1	-2.3	3.7

자료: 1) 북한의 공식통계는 북한 당국의 유엔 제출 자료.

2) 유엔의 추정치는 <http://unstats.un.org>.

3) 한국은행 추정치는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년도 참조.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이 새로운 경제정책의 추진과 함께 7·1조치로 대변되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제한적 수용 등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2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북한경제는 2008년에는 석탄증산 및 곡물생산 증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북한경제는 곡물, 전력, 석탄 등 기초부문의 성장 증가와 이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가동률 상승 등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도 북한의 경제성장은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곡물생산 증가,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증유 및 원자재 지원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성장 동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

선.” 『경제연구』, 2003년 2호, p. 7.

7) 박명혁,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p. 9.

8) “국방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조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p. 27.



로 보기는 어렵다.<sup>9)</sup>

<표 II -2>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농림어업	5.0	-2.6	-9.4	8.2
광공업	4.4	0.9	0.7	2.5
광업	3.5	1.9	0.4	2.3
제조업	4.9	0.4	0.8	2.5
(경공업)	(3.9)	(-0.6)	(-1.7)	(1.3)
(중화학공업)	(5.4)	(1.1)	(2.3)	(3.3)
전기가수수도업	4.4	2.7	4.8	6.1
건설업	6.1	-11.5	-1.5	1.1
서비스업	1.3	1.1	1.7	0.7
정 부	0.6	0.8	1.8	0.3
기 타	2.9	1.8	1.5	1.7
국내총생산(GDP)	3.8	-1.1	-2.3	3.7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2008년도에 양호한 기상조건 등에 힘입어 곡물 생산 전년대비 8.2% 증가(2007년도 -9.4%)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요 곡물현황을 보면 농산물은 맥류(-10.1%)와 옥수수(-2.7%)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벼(21.7%), 서류(7.2%) 등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 전년에 비해 10.9% 증가하였다.

광공업 부문에서는 석탄, 금속광물(철광석 등), 비금속광물(마그네사이트 등) 등의 생산이 모두 늘어나 전년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생산은 전년대비 1.6% 늘었으며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를 중심으로 각각 전년대비 3.2%와 2.9% 증가하였다.

9) 한국은행,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09.6), p. 1.

제조업은 경공업 생산이 증가로 전환되고 중화학공업의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는데,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주도한 업종은 철강, 화학, 조립금속 및 기계제품 등이다. 전기가스수도업은 화력발전(9.8%)과 수력발전(5.6%)이 모두 늘어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업도 평양시 재건·현대화 사업, 발전소 개보수 등에 따라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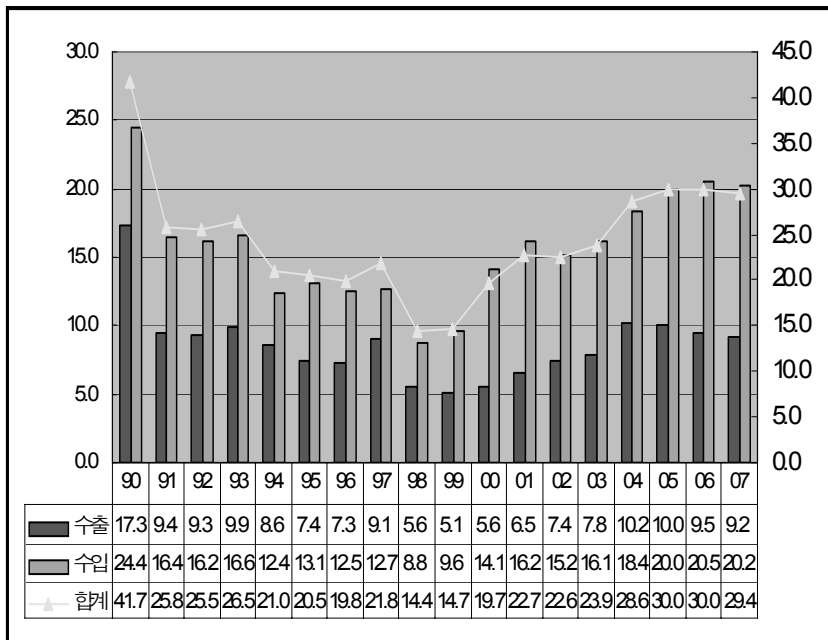
## (2) 대외경제

북한의 대외무역은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체의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14억 4,219만 달러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1999년부터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체 생산가동률의 증가, 대중국 무역의 확대 등에 힘입어 대외무역이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5년에는 무역총액이 1990년대 들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구소련의 붕괴로 청산결제가 폐지된 이후 최대 규모였다.<sup>10)</sup> 2006년에는 전년대비 0.2% 감소한 29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5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조치 및 개별국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도 29억 4,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함으로써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은 3.0% 감소한 9억 1,900만 달러로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수입은 1.3% 감소한 20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수입은 2002년 이후 처음 감소하였다.

10) KOTRA,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2007.6), p. 5.

〈그림 II-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KOTRA.

북한의 주요 국가별 무역동향을 보면, 핵실험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와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 대한 무역 편중이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어, 지난 2004년도에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48.5%였지만 2007년에는 67.1%를 기록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핵문제 등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2007년에는 북핵실험에 따른 추가적 경제제재로 인해 92.3%나 감소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들로는 태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독일 등이며, 전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무역비중이 높고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북한의 10대 무역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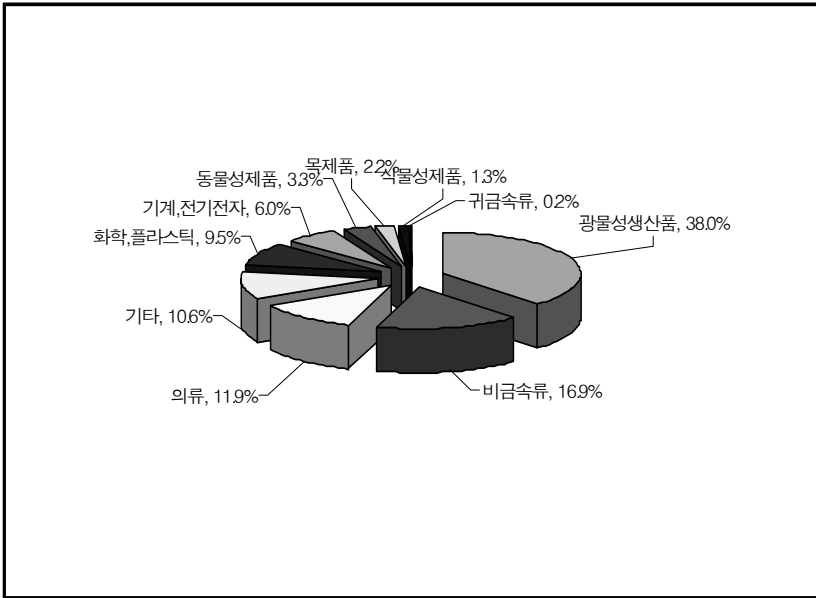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무역총액		점유율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1	중국	467,718	581,521	1,231,886	1,392,453	1,699,604	1,973,974	56.7%	67.1%
2	태국	147,329	36,199	226,920	192,469	374,249	228,668	12.5%	7.8%
3	러시아	20,076	33,539	190,563	126,068	210,639	159,607	7.0%	5.4%
4	인도	71,915	90,620	44,587	35,768	116,502	126,388	3.9%	4.3%
5	브라질	-	33,996	-	33,504	-	67,500	-	2.3%
6	싱가포르	6,564	1,025	60,048	54,649	66,612	55,674	2.2%	1.9%
7	독일	17,000	14,470	59,294	36,795	76,294	51,265	2.5%	1.7%
8	네덜란드	10,318	12,100	21,853	15,764	32,171	27,8864	1.1%	0.9%
9	대만	2,776	3,268	21,602	21,669	24,378	24,937	0.8%	0.8%
10	알제리	-	19,516	-	0	-	19,516	-	0.7%
10대 교역국 합계		743,696	826,254	1,856,753	1,909,139	2,600,449	2,735,393	86.8%	93.0%
기타		203,099	92,517	192,255	113,167	395,354	205,684	13.2%	7.0%
전체 교역규모		946,795	918,771	2,049,008	2,022,306	2,995,803	2,941,077	100.0%	100.0%

자료: KOTRA.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의 경우 2007년도에는 광물성 생산품과 비금속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였다. 광물성 생산품과 비금속류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각각 43.0%, 13.4%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수출에서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4.9%를 차지하였다(<그림 II-2> 참조). 반면, 수산물, 어패류 등의 동물성 생산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55.9% 감소하였는데,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계·전기전자제품의 수출도 3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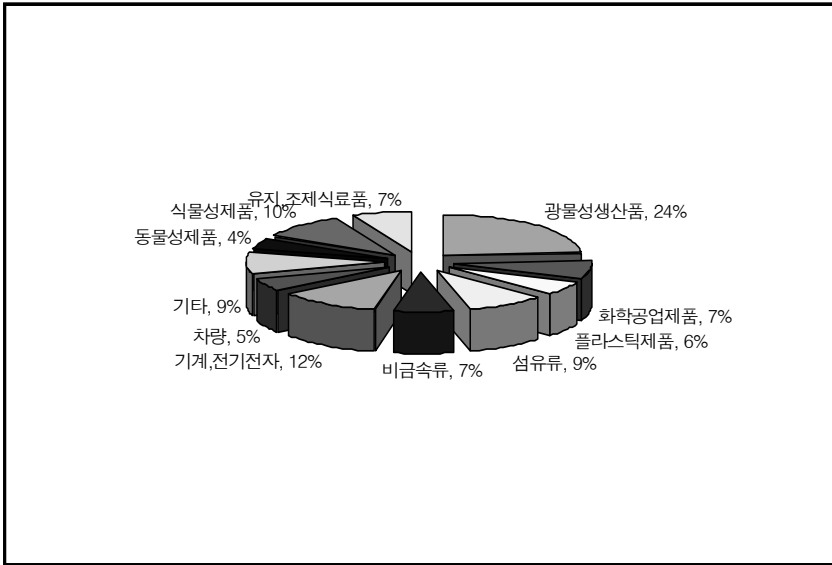
&lt;그림 II-2&gt; 북한의 품목별 수출비중



자료: KOTRA.

수입의 경우 식량수입의 증가로 인해 식물성 제품의 수입이 전년대비 2.6 배 규모인 1억 9,58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북한은 2007년에 모두 37.9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였는데, 이중 대중국 수입이 13.6만 톤, 대태국 수입이 21.2만 톤을 각각 기록하였다. 반면, 지난 3년간 계속 수입증가를 주도하였던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은 7.7% 감소한 4억 9,135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던 광물성 연료 및 광물류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북한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II-3> 북한의 품목별 수입 비중



자료: KOTRA.

한편,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액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중국 및 화교자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sup>11)</sup> 1991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투자유치 총액은 약 8억 8천만 달러(추정치)에 불과하며,<sup>12)</sup> 이 역시 대부분 조총련계 기업, 한국기업, 중국 및 화교계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서방국가 기업들의 투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외개방을 추진한 중국은 물론 북한보다 늦게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베트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11)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누계는 2006년 상반기까지 44개 사업으로 투자합의액은 2억 1,935만 달러이며, 실제투자액은 1억 2,72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으로 대북투자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가 거의 중단되었으며, 2007년에도 신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을 참조.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체제개혁을 동반한 대외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관계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으며, 체제개혁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이 외자유치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II -4> 북한·중국·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북 한	중 국	베 트 남
1991~96 <sup>1)</sup>	24 <sup>2)</sup>	25,476	1,217
1997	307 <sup>2)</sup>	44,237	2,587
1998	31 <sup>2)</sup>	43,751	1,700
1999	-15 <sup>2)</sup>	40,319	1,484
2000	5 <sup>2)</sup>	40,772	1,289
2001	-24 <sup>2)</sup>	46,846	1,300
2002	12 <sup>2)</sup>	52,700	1,200
2003	158 <sup>2)</sup>	53,505	1,450
2004	197 <sup>2)</sup>	60,360	1,610
2005	50 <sup>2)</sup>	72,406	2,021
2006	135 <sup>2)</sup>	69,468	2,315

주: 1) Annual average.

2) 이는 추정치임.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현재까지 외자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투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현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해외교포 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우선, 일본의 대북투자는 ‘조조경제교류’라고 불릴 만큼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가 거의 전부였다. 1990년대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중국의 대북투자도 중국 연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기업의 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한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대북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투자환경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시장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개념 하에서 해외교포 기업들의 투자는 명목상 북한의 자본이라는 자기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중국 및 화교자본의 대북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교자본의 특징은 제조업보다는 주로 부동산 및 금융 분야의 투자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자본은 북한시장에서도 예외없이 부동산 및 금융 분야부터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7월 홍콩반환 이후 화교자본이 북한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1999년 이후 중국 및 화교자본의 대북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석탄, 철광석 등 북한의 원자재 및 광물자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동북3성 개발에 따른 원부자재의 확보의 필요성과 국제시장에서의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미국 및 일본, EU 등 서방기업들도 대북투자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기업들은 서방국가의 기업 속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기업의 대북 투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와, 일본기업의 대북 투자는 북·일 수교 및 대일 청구권의 지급시기와 각각 연계되어 있다. 특히, 2008년 북핵문제의 일부 진전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등을 해제하였는데, 이에 따른 향후 미국과 일본 등 서방권 기업들의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향후 외국기업들의 본격적인 대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해제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문제의 해결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투자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북투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경제활동 참여라기보다는 농업협력 등과 같은 원조 및 개발지원형 진출 내지는 일부 지역의 관광·서비스업 진출, 일부 접경지역의 인프라 건설 참여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단기적인 외화수입 증대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재정

북한의 재정구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제침체기, 즉 고난의 행군기에 이르러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의 조세수입의 근간인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95~97년의 예산 지출과 결산 자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기 동안의 재정 상황을 북한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998년의 재정수입 규모가 198억 원(북한원)으로써 그동안의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994년의 재정수입인 416억원의 47.6%에 그치고 있다. 또한 IMF가 입수한 북한의 국가 재정 자료에도 1995년과 1996년의 북한 재정수입은 각각 243억원, 20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예산·결산 발표에도 이 같은 재정수입 악화를 인정하고 있다.<sup>13)</sup>

북한 정부의 재정수입 급감은 정부 재정에서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중앙계획을 뒷받침하던 전통적인 재정제도의 붕괴 또는 변화를 의미한다. 재정수입의 위기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은 독립채산제 기업에게 자금의 내부 유보와 사용의 독자성을 일정 정도 부여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를 재정에서 조달하기보다 금융제도를 통한 대부로 조달하도록 자금조달방식의 전환을 시도하였다.<sup>14)</sup> 그리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도 확대되어 자체유동자금, 자체기본건설자금, 자체과학기술발전비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sup>15)</sup>

재정난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시도와 함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도 진행하였다. 우선 생산재 생산기업에게도 거래수입

13)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겹쌍었던 지난 몇 해 동안의 고난의 행군 기간 나라의 재정형태도 매우 긴장하였다” (북한 예산·결산 발표, 1999).

14) 북한의 리원경(2002)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1990년대의 정세의 변화로 기업소의 유동자금수요를 기업소 자체의 유보자금과 은행대부로 충당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15) 이는 1985년에 발간된 경제사전과 1995년에 출판된 재정금융사전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1985~1995년의 어느 기간에 시작된 것으로 고난의 행군기에 이러한 경향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 1985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동안의 개혁 경험이 북한에도 영향을 주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대출과 기업내부유보이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금이 부과되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재정체계에서 거래수입금은 최종재 생산 기업소에 한하여 부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생산재 생산기업에도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발간된 재정금융사전에는 거래수입금이 소비재와 생산재에 모두 부과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재 생산기업에 거래수입금을 부과함에 따라 최종소비재 가격에 그 상승폭이 더해져 최종소비재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소비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생산재 기업에게 거래수입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재정수입의 악화가 심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래수입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95~97년 동안 재정수입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1년과 1996년의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재정수입에서 거래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에서 39.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금액으로나 비중으로나 거래수입금은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은 1995~97년 3년 동안의 고난의 행군기 이후 재정체계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정부는 인민경제계획법, 국가예산 수납체계 변경 등의 정책을 통하여 계획경제의 복구를 시도하였다. 그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의 급감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1997년 재정수입은 197.1억원으로서 1981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지만 1998년에 197.9억원, 1999년에는 198.0억원의 수입을 기록하는 등 재정수입의 극심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다. 즉 고난의 행군기 이전에 비해 1998년 이후에도 재정수입은 여전히 증가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반면 사경제활동은 급증하여 공식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16) 북한은 2002년까지 소비재가격면차보조금을 지불해왔다. 생산재에 거래수입금이 부과되면 수입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소비재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면차보조금, 즉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북한은 2002년 소비재가격면차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lt;표 II -5&gt; 북한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구성비, 1980~2001년

		1980	1991	1992	1993	1996	2000	2001
재정수입 (억원)			371.95	395.40	405.17	203.20	209.34	216.40
재정수입 에서의 비중 (%)	거래수입금		46.5			39.8	43.2	
	국가기업이익금		39.1			31.0	32.9	
	기타		15.0			29.2	23.9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6.8			11.1		
	협동농장납부금		0.1			0.9		
	사회보험료		0.2			0.4		
	국유재산판매 및 기타수입		7.3			16.9		
재정지출 (억원)			369.92	393.34	402.43	206.00	209.55	216.79
재정지출 에서의 비중 (%)	인민경제비	60.5	67.9	67.7	67.8	60.2	40.1	42.3
	사회문화시책비	22.2	18.8	19.1	19.0	24.3	38.2	38.1
	군사비	14.6	12.1	11.4	11.5	14.6	14.3	14.4
	국가관리비	2.7	1.3	1.8	1.7	0.9	7.4	5.2

주: 사회문화시책비는 2000년부터 인민적시책비로 개명되었다. 또한 이전까지 인민경제비에 포함되었던 추가적시책비도 2000년부터 인민적시책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IMF(1997), 고일동(2004) 참조.

따라서 북한은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계획의 작성 및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계획부문의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등,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크게 훼손된 공식부문을 정상화하고 계획경제를 복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새로운 법의 제정과 함께 예산수납체계도 1999년 이전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산업의 부문별수납체제로 전환하였다.

재정지출 항목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2000년부터 사회문화시책비가 인민적시책비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인민경제비에 포함되었던 추가적 시책비가 인민적시책비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의 인민경제비 비중은 전 세출 중 40.1%를 차지하여 1999년의 60.2%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인민적 시책비의 비중은 1999년 24.3%에서 2000년 38.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부가 인민들의 복지에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대내적 선전 목적의 일환으로 보인다.

인민계획법의 제정과 예산수납체계 변경 등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정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99년 198억원이었던 재정수입은 2000, 2001년에는 각각 209억원과 216.4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각각 5.5%, 3.5%의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71-1994년의 북한재정수입의 연평균증가율 8.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sup>17)</sup>

북한당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리를 견지하면서 시장경제요소의 부분적 도입을 추구하였다.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공식가격을 2차 경제의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리는 가격의 현실화, 임금의 대폭 인상, 가격설정방식의 개편, 일부 국가계획 수립권한의 하부위임, 공장·기업소에 부분적인 경영자율성 부여, 원부자재 시장의 개설, 분배의 차등화 강화, 사회보장체계 개편 등의 경제조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직간접적으로 재정제도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의 재정체계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크게 변화하였다. 첫째, 기업의 성과지표가 이전의 생산량 기준에서 변수입지표 기준으로 변화하였다(변수입은 총판매수입에서 임금을 제외한 원가를 차감한 것임).<sup>18)</sup> 그리고 북한정부는 이 변수입을 근로자의 성과급과 기업소의 조세 납부의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 위하여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기업 내부에 적립하도록 변경하였다.<sup>19)</sup> 셋째, 또한 예산수입 증대를 위해 토지사용료와 같은 새로운 세입항목이 신설되었다. 토지사용료는 2002년 이전에 신설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sup>20)</sup>

17) 그러나 이 수치들은 경성가격 기준으로서 물가를 고려한 불변가격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 소련의 경우도 1965년 경제개혁 때, 기존의 생산량 중심의 지표를 판매량 위주의 지표로 바꾸었다.

19) 북한의 임광남은 「경제연구」에서 감가상각금을 기업에 유보하게 되면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고정자산의 보수와 재생산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제도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20) 2003년 3월 26일 예산·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수입 중 토지사용료 수입이 2002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3.7%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lt;표 II-6&gt; 재정수입 제도의 변화

<7.1 조치 이전>	<7.1 조치>	<7.1 조치 이후>
국가 기업 이익금	국가기업이득금	좌동
봉사료 수입금		
거래국영기업소 소비재 관련 수입금	협동단체 이득금	좌동
생산협동조합 생산품 관련 협동단체 이익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기업소 이관 (예산수입 제외)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재편입)
사회보험료 수입	사회보험료 수입	개인 및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확대)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좌동	좌동
-	토지사용료 수입(신설)	부동산사용료(확대개편)

자료: 문성민(2005).

한편, 2000년의 부문별 수납체계는 2002년에 다시 지역별 수납체계로 회귀하였다. 이는 2000년 이전과 같이 각 지방정권기관이 구역 내의 공장이나 기업소들의 수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조세징수는 지방정권기관이 담당하고 조업정상화는 성 및 관리국이 담당하는 이원화체계를 통해 상호 견제와 감시를 강화시킨 예라고 볼 수 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식량 및 생필품, 연료비, 교통비 및 주거비, 전기 등에 대해 정부가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던 가격보전제도를 폐지하여 이들에 대한 재정보조금이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무상으로 공급되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적 부조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재정부담을 완화시켰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의 재정수입의 증가율과 재정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북한은 2002년과 2003년의 세입과 세출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2005년 4월 11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제3차 회의에서 북한의 문일봉 재정상은 2004년의 세입과 세출 규모를 각각 3,375.5억원과 3,488억원으로 밝혔다. 그 이후 2007년까지 북한은 다시 세입과 세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전년의 결산 대비 증가율, 그리고 재정수입의 증가율 예상

치와 이 예산 대비 달성률을 발표하고 있다.

<표 II -7> 북한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구성비, 2003~2007년

		2003	2004	2005 <sup>1)</sup>	2006	2007
재정수입	금액(억원)	3,323.2	3,375.5	3,917.0	4,092.9	4,341.0
	증가율 (%)		1.6	16.1	4.5	6.1
	계획대비 달성률 (%)	100.9		100.8	97.5	100.2
전년 대비 재정수입의 항목별 증가율(% <sup>1)</sup> )	국가기업이득금 <sup>2)</sup>	5.0	16.5	14.2 <sup>5)</sup>	7.2	6.4
	협동단체이득금	3.3		24.3 <sup>5)</sup>	23.2	4.5
	사회보험료	6.7		5.7 <sup>5)</sup>	141.0	15.1
	토지(부동산)사용료	3.7			12.0	15.4
	고정자산감가상각금				1.8	9.6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				1.7	
	기타				0.9	
	재정지출	금액(억원)	3,234.4	3,488.0	4,056.9	4,192.8
	증가율 (%)		7.8	16.3	3.3	5.1
	계획대비 달성률 (%)	98.2	99.3	104.4	99.9	101.7
재정지출에 서의 비중 (%)	인민경제비	23.3	41.3	67.7	40.8	41.0
	인민적시책비 <sup>3)</sup>	40.5	40.8	19.1	40.7	40.8
	군사비	15.5	15.6	15.9	16.0	15.7
	국가관리비		2.3		2.5	2.5
물가 상승률	UN GDP 디플레이터	-0.4	-1.1	3.6	9.2	3.8
	쌀 1kg 가격			13.8	-0.8	38.9

1) 전년 대비 항목별 재정수입의 증가율은 전년도에 전망한 수치임 (2005년 제외)

2) 2002년 이후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통합되어 국가기업이득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이는 임금과 경상이익의 합계에 해당하는 변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형태이다.

3) 인민적시책비는 2000년까지 사회문화시책비로 명명되었다.

4) 2005년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항목의 증가율 실적이다.

5) 2005년의 재정수입의 항목별 증가율 수치는 결산치이다.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발표자료, 한국은행, UN통계국, 좋은벗들, CIA, 탈북자조사자료 등을 참조.

## 다. 인프라

### (1) 에너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1980년대 후반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원유도입의 급감, 석탄생산 부진 및 자연재해 등으로 에너지 공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표 II-8> 남북한의 1차 에너지 총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연 도	남 한		북 한	
	총소비량 (천TOE)	1인당소비량 (TOE)	총소비량	1인당소비량 (TOE)
1985	56,296	1.38	24,940	1.31
1990	93,192	2.17	23,963	1.19
1995	150,437	3.34	17,280	0.80
2000	192,887	4.10	15,687	0.71
2001	198,409	4.19	16,230	0.73
2002	208,636	4.38	15,638	0.70
2003	215,067	4.49	16,079	0.71
2004	220,238	4.58	16,535	0.73
2005	228,622	4.75	17,127	0.75
2006	233,372	4.83	17,955	0.78
2007	236,454	4.86	15,594	0.67

주: 1) 북한은 공급량.

2) 2007년 남한자료는 개정된 열량환산계수 적용.

자료: 통계청.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등에 힘입어 북한경제가 다소 개선되면서 에너지 생산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생산 관련 인프라가 노후화 단계에 들어가고, 북한의 경제역량 한계로 이를 교체하거나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증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sup>21)</sup>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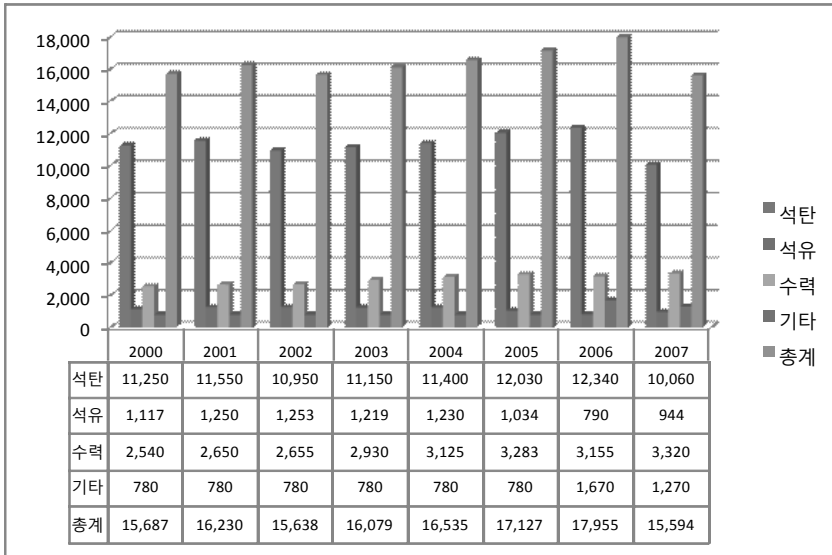
21) 통일부가 추계한 통계에 따르면 1970~1989년까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약 38.8% 증가한 반면, 1989~2005년간 약 3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진·박지민, 『대북 전력지원 및 협력방안 연구』(서울: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현재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규모는 15,594천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남한 에너지 소비량의 6.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sup>22)</sup>

북한은 에너지 공급능력과 함께 에너지 유통(수송) 인프라도 거의 붕괴되어 실제 북한의 산업체와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은 북한이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더 작은 규모에 머물 것으로 추전되고 있다. 즉,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생산, 수입, 소비 모두가 한계상황에 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4>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현황

(단위: 천TOE)



주: 기타에는 신탄, 폐기물 가열 등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p. 4.

22)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08』(2008), p. 65.



&lt;표 II-9&gt; 북한 에너지난의 원인

원인별		주요 상황
에너지산업 및 경제구조	에너지산업의 불균형 자원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비가 높은 수력에 과도한 투자</li> <li>- 투자의 비효율(투자대비 저에너지 생산성)</li> <li>- 대체 에너지 개발 한계(부족한 자원 및 낮은 기술력)</li> </ul>
	에너지-경제의 비효율적 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군수산업 및 중공업 중심)</li> <li>- 공업생산성 저하로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여력 감소</li> <li>- 외화부족으로 인한 투자자원 부족</li> </ul>
구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상무역, 저가의 석유지원 중단</li> <li>- 설비기술 및 부품지원 감축</li> <li>- 에너지 공급비용 상승</li> </ul>
대규모 자연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96년 대홍수로 발전·송배전 설비 피해</li> <li>- 수력발전댐의 토사유입, 석탄광 침수</li> <li>- 1997년 가뭄으로 인한 댐 용수량 부족</li> </ul>

자료: 정우진, 『에너지산업의 대북한 진출방안 연구』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참조.

북한 에너지난의 원인은 첫째,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폐쇄적 에너지 정책<sup>23)</sup>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에너지 및 경제의 비효율적 순환이다. 둘째는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변화이다. 셋째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능력 감소이다.<sup>24)</sup>

우선,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축소되면서 북한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석유 및 석탄(유연탄)의 시혜성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되었고, 에너지 설비 및 관련기술에 대한 지원도 거의 중단되었다. 북한의 발전소와 정유소 설비가 대부분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건설,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중단은 설비 및 부품의 보수 및 교체를 어렵게 하여 에너지설비의 노후화를 가속시켰다. 이러한 설비 노

23) 북한의 에너지정책은 석탄을 주로 하고 원유를 보조 수단으로 하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이다.

24) 정우진·박지민, 『대북 전력지원 및 협력방안 연구』, p. 6.

후화는 에너지 생산설비의 기동률 저하와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권 붕괴 및 경제난으로 에너지산업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는 와중에 1990년 중반 북한을 강타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북한 에너지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 (2) 철도

북한의 운송체계는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철도가 담당하고 있는 소위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량수송과 규칙적인 수송이 가능하며 수송시간이 짧고 수송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sup>25)</sup>

북한의 철도망은 10여개 기간노선과 90여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노선(평의선, 평부선), 동부노선(평라선, 금강산청년선, 함북선), 동서노선(청년이천선, 평라선), 내륙노선(만포선, 백두산 청년선)으로 구분된다. 산악지역이 많아 철도망이 낭림산맥을 경계로 동서로 양분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철도망의 동서연결과 전철화를 적극 추진하여 2개의 동서연결철도망(평라선, 청년이천선)을 갖추고 있으며, 전철화율은 78% 수준이다.

주요 노선의 특징을 보면, 평부선은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186.5km의 철도로서 노선상에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2·8시멘트연합기업소, 사리원방직공장, 황북지구 무연탄종합기업소, 재령평야 및 연백평야 등이 위치해 있다. 주요 운송 품목으로는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선철, 강재를 비롯한 흑색금속은 평양방향으로 수송된다. 주요 화물거점인 집중화물역으로는 개성, 평산, 서사리원, 서흥, 황주, 중화 등 6개 역이 있으며, 개성집중화물역은 개성, 개풍, 판문, 장풍군을 담당한다.

25) 철도의 평균 견인중량은 1,300톤(연안해운 1,000톤)이며, 북한철도의 수송원가: 자동차의 34%, 해상운송의 53% 수준이다. 북한 철도화물의 평균수송거리: 160km: 자동차 운송거리의 15배, 연안해운거리의 1.7배에 달한다.

&lt;그림 II-5&gt; 북한의 주요 철도망



평의선은 평양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224.8km의 철도노선으로 1964년 8월에 전구간이 전철화되고 중량레일로 교체된다. 이에 따라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집중화물역으로는 신의주, 용천, 동림, 정주, 신안주, 숙천, 서포 등 7개 역이 있다. 노선경유 지역에 청천강 공업지구, 신의주 공업지구와 북증 및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용암포조선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그리고 4개의 평야 등이 위치해 있다. 주요 수송품목은 석탄, 광석, 금속, 목재, 시멘트 등이며, 이 중 석탄은 개천지구 및 순천지구의 무연탄을 평양지구로, 구장, 개천지구의 무연탄은 신의주지구로, 안주지구의 유연탄은 청천강 화력발전소로 수송된다.<sup>26)</sup>

평라선은 북한 최장의 철도노선으로 평양부터 라진까지의 781.1km의 노

선이다. 평양-순천-고원-함흥-단천-길주-청진을 경유하여 나진까지 연결되며 동·서교류 물동량의 85~90%를 담당한다. 6개년 경제계획(1971~1976년) 기간 중에 전철화가 완료되어 수송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집중화물역으로는 고원, 함흥, 나진 등 17개 역이 있다. 수송되는 화물의 품목은 공장, 기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석탄, 광석같은 연료 및 원료와 공장 및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건재, 비료, 금속 등이다.

함북선은 반죽/회령에서 나진을 연결하는 326.9km의 철도노선이다. 이 노선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접해 있어 대외 화물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중화물역으로는 선봉, 새별, 온성, 회령, 부령 등 5개 역이 있다. 국경에서 중국으로는 남양역과 중국 도문역이 연결되며 러시아 지역으로는 함북선의 지선인 홍의지선이 두만강역에서 핫산역과 연결된다. 함북선의 주요 취급화물은 석탄, 광석, 목재, 원유, 화학비료, 콕스탄 등이다.

청년이천선은 황해도 평산에서 강원도 세포를 연결하는 140.9km의 동서 연결노선으로, 평산에서 평부선, 세포에서 강원선과 연결된다. 평산, 정봉, 이천, 세포 등 4개의 집중화물역이 있으며, 주로 산간지대의 지하자원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황해남·북도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동부지구로 수송할 때 이용되며,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철강재와 2.8시멘트연합기업소의 시멘트를 각 지역으로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 철도정책의 기본방향은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수립되었다. 이 회의에서 철도운송부문의 기본방침으로 집중수송, 집합수송, 연대수송을 제시하였다.<sup>27)</sup> 또한 철도수송 능력의 향상, 전철화, 신호자동화, 차량생산, 철도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북한은 철도가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철도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을 철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약 5,248km이나, 노선의 98%가 단선이고, 대부분의 철도 관련 시설은

26) 신의주 집중화물역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단동역과 연결되는 국경역으로 대외무역 화물을 취급하며, 주요 수출화물은 무연탄이고 수입화물은 콕스탄으로 신의주역에서 송림선의 장천리역까지 수입 콕스탄이 집중 수송되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 공급된다.

27) 집중수송은 광석, 석탄을 비롯한 큰 짐을 실은 화차가 중간역에 기착하지 않고 직통 수송하는 방식이다. 집합수송은 규격화된 짐(컨테이너)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이며, 연대수송: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연결시켜 수송하는 방식(자동차와 철도, 철도와 선박 등)이다.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제철도 노선으로는 신의주~단동, 만포~집안, 남양~도문, 두만강 역~하산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이 있다. 중국연결 노선으로는 평양~북경간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청진~남양~도문 연결 노선은 주요화물수송 노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러시아 연결노선은 두만강~하산 구간으로 러시아 광궤와의 연결을 위두만복합궤도(청진~하산간), 대차교환시설(두만강 역, 웅상역)이 설치된다. 중국, 러시아간 국제철도를 이용한 북한의 화물취급가능량은 약 1,100만 톤으로서 북한~러시아간 화물처리 능력은 380만 톤(북한도착화물 120만 톤, 북한출발 화물선은 260만 톤)이며, 북한~중국간 화물처리 능력은 720만 톤(북한도착화물 300만 톤, 북한출발화물 420만 톤)으로 추산된다.

### (3) 도로

북한의 도로는 철도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주로 단거리 운송에 이용되고 있다. 도로는 ‘인민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수송수요의 보장, 경제건설, 인민에게 생활편의를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은 도로건설의 원칙으로 ‘산간지대의 교통문화해결, 농촌의 기계화실현,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는 도로건설’로 삼고, 이와 아울러 도로 운송은 30km 이내의 단거리 운송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1980년대까지 북한의 도로는 주요 철도역이나 항구 등을 잇는 연결교통으로써 보조수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철도나 수운 망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장거리수송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도로수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동안의 철도 위주 교통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 북한은 도로수송이 기동성 및 운행속도가 높으며 원하는 시간에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수송은 주로 가까운 거리 약 150~200km 수준에서 수송원가가 저렴하고 도로 건설비가 철도 건설비에 비해 수십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표 II-10> 북한의 주요 고속도로 현황

구 간	길 이	개통시기	비고
평양-남포	44km	1978년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
평양-원산	172km	1978년	콘크리트(상태불량), 4차선, 비상활주로로 이용
원산-금강산	114km	1989년	노폭 12m, 콘크리트도로
평양-개성	170km	1992년	노폭 24m, 4차선, 아스팔트
평양-향산	120km	1996	콘크리트도로, 도로 양호
평양-남포 (청년영웅도로)	46.3km	2000년	노폭 50m, 콘크리트 도로

북한에는 6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며 그 연장은 666km로 파악된다. 6개의 고속도로는 평양-남포간(2개 노선), 평양-원산간, 평양-향산간, 평양-개성간, 원산-금강산간 고속도로 등이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혁명전적시 시찰, 외국인 관광객 수송, 군 작전용 물자수송 및 인력 이동, 일부 긴급 화물 수송에 주로 사용되며, 고속도로를 활용한 실질적인 화물, 여객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4) 항만

북한은 동해와 서해가 분리된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1960년대까지는 연안 해운 수준의 해운을 유지하였으나, 1961년에 수립된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에서부터 해운, 항만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실시하였다. 북한은 7개년계획기간 중에 해상운송부문의 목표를 “연해수송을 보장하고 철도와의 연대수송을 확대하며 특히 우리나라 선박에 의한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것임. 남포, 흥남, 청진, 원산, 단천 등 중요 항구들을 현대적 시설로 개선 확장하여 대형선박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두고 항만 투자를 실시하였다.

대외무역이 확대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원유수입의 급증에 따라 원유수송전용 부두의 신설과 항만의 적재 및 보관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기본 목표하에서 기존 무역항들을 정비, 보강하면서 나진,

송림, 해주 등의 무역항을 새로 지정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화물선 건조에 착수하였다.

북한의 항만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항 8개, 원양수산 기지항 5개, 어항 30여 개 등이 있다. 이중 무역항은 청진, 라진, 선봉, 흥남, 원산, 남포, 송림, 해주항 등이다. 북한의 항만시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화물수송 분담에 있어 철도이용률(90%) 및 도로이용률(7%)에 미치지 못하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에서도 항만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물류비 과다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II -11>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항명	하역 능력 (만톤)	접안 능력 (만톤)	수심 (m)	부두 연장 (m)	주요장비	비고
청진	800	2	10.0	5,270	15톤급 크레인	1974년 시설과 장비보강, 1983년 중국의 대일중개무역 동향: 만경봉호 전용부두 서향: 김책제철소
흥남	450	1	6.7~13	1,630	10톤급 일반 및 갠트리 크레인	10톤 갠트리카레인 보유 1960년 무역항으로 개항
나진	300	1.5	10	2,280	5~15톤 크레인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소련의 대동남아 수출창고)
원산	360	1	6.1~7.9	2,250		1976년 무역항으로 개항 군항으로 이용되고 있음
남포	800	2	10~13. 5	1,890	5톤급 크레인, 해상크레인	평양과 고속도로 전기철도로 연결, 동향은 석탄부두로 이 용
해주	240	1	7~12	1,350	10톤급 크레인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	160	1	10	700	18톤급 크레인	1975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제철소 전용부두
선봉	300	20	23	-		석유도입항으로 개발
합계	3,410 (3,501)			15,640		

주: 괄호 안은 북한 전체 하역능력.

자료: Lloyd, Ports of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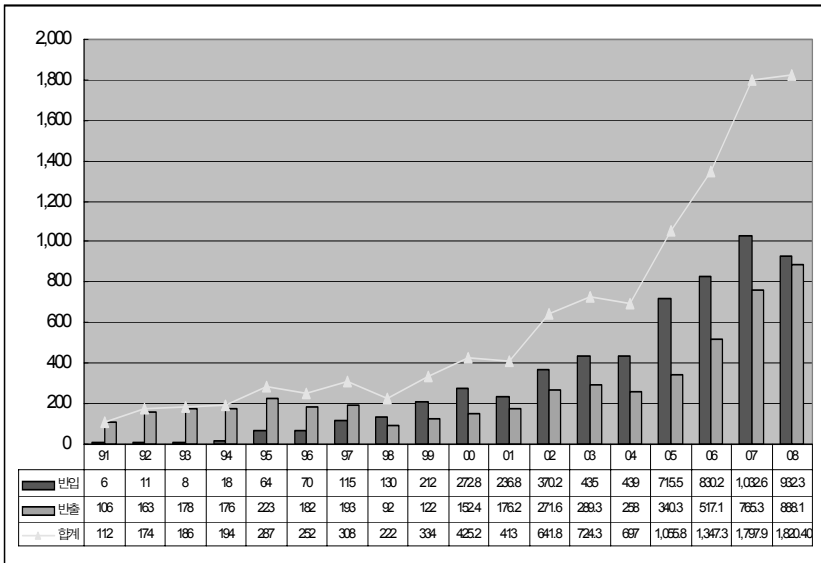
## 2. 남북경협 현황 및 평가

### 가. 남북교역

1988년 한국 정부의 「7·7선언」과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시작된 남북 교역은 곧 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1989.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등의 관련법령이 제정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남북교역은 한반도의 대외환경과 남북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다.

<그림 II-6> 남북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각호.

2007년도 남북교역 규모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진전과 10월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한반도 내외의 화해 분위기와 함께, 개성공단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및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총교역규모는 전년대비 33.2%나 증가한 17억 9,789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생산품의 반입증가, 북한산 농수산물 및 광산물의



반입 증가 등 상업적 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적 거래는 14억 3,117만 달러로 전년대비 54.2%나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의 79.6%를 차지함으로써 남북교역의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반면 사회문화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비상업적 거래는 13% 감소한 3억 6,672만 달러에 머물렀다.

2008년도 남북교역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남북 당국간 대화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물자 반출입의 활성화와 기존 경협사업의 지속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남북교역은 12억 2,431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였지만, 같은 해 7월 금강산 관광객의 사망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08년도 남북경협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8억 203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반출은 8억 8812만 달러로 14.0% 감소한 반면, 반입은 9억 3,226만 달러로 21.8% 증가하였다.

<표 II-12> 남북교역의 품목별 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7		2008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농림수산물	184,189	24.1	207,914	22.3	12.9
광산물	120,796	15.8	99,787	10.7	-17.4
화학공업제품	4,589	0.6	6,418	0.7	39.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4,764	0.6	10,961	1.2	130.1
섬유류	190,541	24.8	324,831	34.8	70.5
생활용품	18,912	2.5	38,991	4.2	106.2
철강·금속제품	163,958	21.7	88,912	9.5	-46.4
기계류	35,887	4.7	59,108	6.3	64.7
전자전기제품	38,335	5.0	94,687	10.2	147
잡제품	1,395	0.2	640	0.1	-54.1
총 계	765,346	100	932,250	100	21.8

자료: 통일부.

2008년 대북한 반출 건수와 품목 수는 각각 36,202건, 813개로 전년대비 34.7%, 1.2% 증가하였으며, 반입 건수와 품목 수는 31,243건과 482개로 전년대비 24.8%와 7.1% 각각 늘어났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상업적 거래는 전년대비 19.7% 증가한 1억 1,200만 달러, 비상업적 거래는 전년대비 70% 감소한 1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업적 거래 중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이 4.1억 달러로 24.8%, 개성공단사업은 8.1억 달러로 83.2% 늘어난 반면 일반교역은 4.0억 달러로 23.4% 감소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에서 인도적 지원은 전년대비 80% 정도 줄어든 6,700만 달러에 머물렀고,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에너지 지원 등이 4,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II-13> 남북교역의 품목별 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7		2008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농림수산물	137,382	13.3	78,239	8.8	-43.1
광산물	79,443	7.7	45,528	5.1	-42.7
화학공업제품	203,000	19.7	68,874	7.8	-66.1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21,800	2.1	29,996	3.4	37.6
섬유류	214,149	20.7	210,035	23.6	-1.9
생활용품	32,688	3.2	35,687	4.0	9.2
철강·금속제품	97,123	9.4	139,007	15.7	43.1
기계류	136,290	13.2	157,385	17.7	15.5
전자전기제품	103,012	10.0	121,717	13.7	18.2
잡제품	7,662	0.7	1,647	0.2	-78.5
총 계	1,032,550	100	888,117	100	-14.0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은 20여년을 경과하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성 및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남북교역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참여기업 및 거래품목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남북교역에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의 상업적 거래가 전체적인 남북교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

역은 여전히 한반도의 정치·안보적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00년 6·15 정상회담과 2007년 10·4 정상회담 등 2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등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교역은 여전히 국내외적 정세나 남북관계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2008년도 남북교역이 상업적 거래에 의해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경협현장에서의 불안감<sup>28)</sup>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나. 대북투자

대북 투자는 지난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직후인 1995년부터 가시화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투자사업이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다. 대북 투자사업은 2008년 12월말 현재 사업승인 건수가 모두 353건에 달하지만, 남북교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 이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대북 협력사업 중에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녹십자의 유로키나제 제조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 및 조립사업, 국양해운의 남북해운사업 등 6~7개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 나머지 사업들은 남한기업의 자체사정 또는 북측과의 협의과정에서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지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참여와 정부의 관광경비 보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관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한전의 경수로 건설사업 및 이와 관련된 통신업·은행업 등도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의 경제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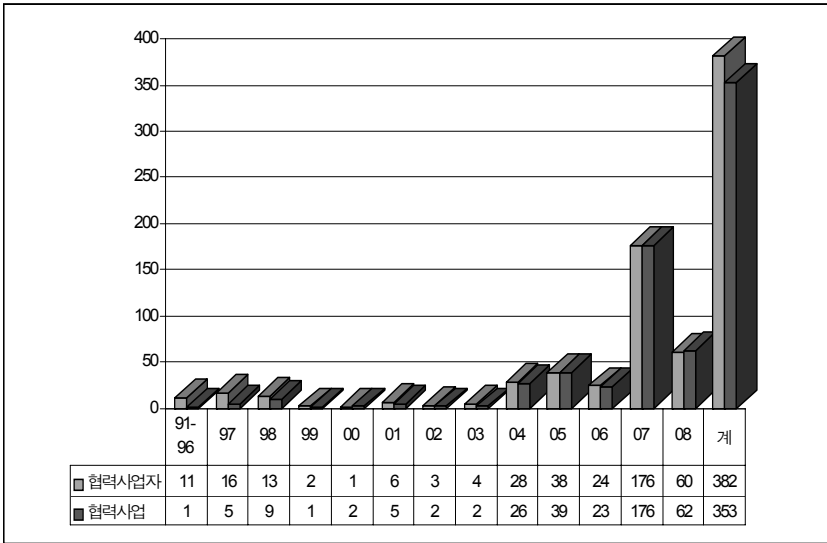
이와 같이 대북 투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불안정과 미흡한 투자보장 장치 등으로 인해 투자리스크가 매우

28) 남북경협 참여 기업체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교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58.0%로 영향을 주지 않다는 4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47.8%로 긍정적인 답변 3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KDI 북한경제팀, “2008년 남북경협에 관한 경험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KDI, 『북한경제리뷰』 (2008. 7)를 참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전력·철도 등 북한의 기본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전력의 경우 전력부족이 심각하고 정전이 예고 없이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전압도 불안정하다. 또한 북한내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철도의 경우에는 단선이며 설비노후화, 전력난 등으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셋째, 투자자 및 기업인들의 통행 및 통신상 제약을 들 수 있다. 기업인의 북한내 통행이 여전히 제한됨으로써 작업지시, 품질관리를 팩스로 하는 등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넷째, 기업경영상의 제한을 들 수 있다. 투자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직접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북한 노동행정기관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이 해외에서 물자를 구입하는 것과 생산품을 북한내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합영사업의 경우에 남한 기업인의 경영이 제한되기도 한다.<sup>29)</sup>

<그림 II -7> 연도별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건)



주: 이중 협력사업자 17건, 협력사업 12건이 각각 취소되었음.  
 자료: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2008. 8.

29) 한국은행,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 (2004), pp. 15~16.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대북 투자사업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한 당국간에 투자관련 제도적 장치가 합의·발효된<sup>30)</sup> 2003년 이후부터 대북 투자사업의 실질적 추진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353건중 328건이 2003년 이후에 승인을 받은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270여건 이상이 개성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이다. 이는 최근의 대북 투자사업이 개성공단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성공여부가 향후 대북 투자사업의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3대 경험사업

### (1) 개성공단사업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 간의 합의로 시작된 개성공단사업은 2003년 6월에 1단계 330만㎡의 개발이 착공되었고, 2007년 10월에 1단계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다.

특히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은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으로 긴장과 대결의 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1,500여 명의 인원과 700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 개발사업과 제품생산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2008년 12월말 현재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기업 등을 포함하여 모두 93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08년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5억 2,485만 달러에 달하고, 총 수출액은 약 9,620만 달러로 누적 생산액의 약 1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30) 남북한 당국은 지난 2000년 12월에 합의한 이후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던 '경협관련 4개 합의서(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에 교환함으로써 남북 경협의 제도화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켰다.

2008년 12월 1일부로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 결과 급격히 증가하던 월별 생산액이 2008년 10월 이후 둔화세를 보이다가 2009년 1월에는 1,803만 달러로 전월대비(2008년 12월 2,224만 달러) 18.9%나 감소하였다. 수출도 2008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08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였다.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31)</sup> 첫째, 남과 북의 비교우위의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이 결합함으로써 남한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의 성공을 통한 북한의 경제 회복과 동시에 현재 남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은 남한과 북한 경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함과 함께 통일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개성공업지구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 내지 못한 남북경협 부문에서 첫 번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성공은 향후 남한 기업들의 북한진출을 촉진시켜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의 개발 실패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후 개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화시켰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공단의 성공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개방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향후 개혁의 가속화와 대외개방의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은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성은 남북한의 군사력이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의 접경지역으로 이 지역의 북한군이 후방으로 이동하고

31) 임강택·임성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41~42.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 되었음. 따라서 개성공단의 사례는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표 II -14>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개수, 만 달러,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합계
가동기업 수(누계)	11	30	65	93	93
생산액	1,491	7,374	18,478	25,142	52,485
수출액	86	1,983	3,967	3,584	9,620
복측 근로자(누계)	6,025	11,189	22,804	38,931	38,931

자료: 통일부.

## (2) 금강산관광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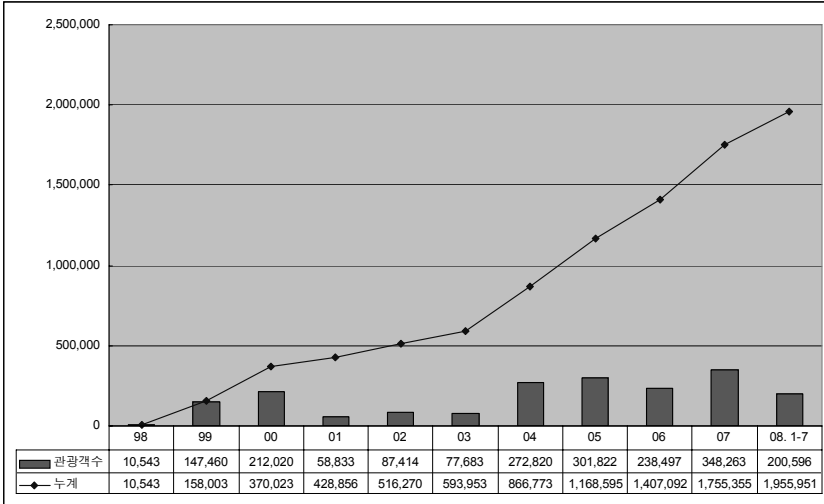
1998년 11월 관광사업이 시작된 이래 금강산관광은 여러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고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2005년 6월 누적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6월 금강산 관광이 내금강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관광객은 더욱 크게 늘어났으며, 2007년도 한 해 동안의 관광객이 34만 8천여 명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실적 이외에도 남북관계 개선, 남북주민들간의 이질감 해소,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금강산관광산업은 국내 관광사업 활성화는 물론, 강원도 고성군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의 피격 사망으로 인한 남북한 당국의 대치와 북한관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기약 없이 중단되어 있다.

<그림 II-8> 금강산 관광객 추이

(단위: 명)



자료: 현대아산.

### (3)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관통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가 완화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협력 관계가 확고히 구축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15 및 10·4 선언의 이행문제와 남측 반보단체의 대북 배라 살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악화되자 북한 당국은 2008년 12월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조치와 함께 경의선 철도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후 북한은 2009년 9월에 철도운행을 재개하였다.



&lt;표 II -15&gt;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구간

노선	종류	규모	구 간	거리 (Km)
경의선	철도	단선	개성역(북)-도라산역(남)	17.1
	도로	4차선	개성공단터(북)-도라산역(남)	8.8
동해선	철도	단선	온정리(북)-저진(남)	27.5
	도로	2차선	고성(북)-송현리(남)	14.2
	임시도로	1차선	고성-군사분계선	1.5

자료: 통일부.

### 3. '상생·공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남북경협的重要한 목표중의 하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은 이미 1988년의 7·7선언에 이은 후속조치에서, 그리고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에 이어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물자교류와 대금결제방안, 통신·통행협정의 체결, 통행로개설 등에 합의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실현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문화된 상태이다.

1994년 8·15 경축사에서 김영삼정부는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해 재차 언급하였으며, 김대중정부도 지난 2000년 신년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도 2007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 역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중요한 대북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의 발전과 남북경

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 가. 남북경제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협력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지역은 20세기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해방과 더불어 냉전구도 하에서 민족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남북한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는 60여년간 지속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전쟁발발 가능성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경제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추진·확대하여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단국가들의 경제교류·협력이 상호간 신뢰회복과 전반적인 관계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통일이전 동·서독과 현재의 중·대만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서독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이 상호간 신뢰구축과 상호의존도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독일통일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에도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대립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정치·군사부문에서의 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최소한의 불편’ 이외에는 통일과 유사한 수준의 교류·협력이 유지되고 있다.

남북한은 전쟁을 치렀고,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체제개혁과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이 정치·군사적 신뢰조성과 평화정착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양측간의 교류·협력이 쉽고 서로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부문에서부터 남북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 사업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정치·군

사부문에까지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자연스럽게 군사부문의 회담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한은 경제부문에서의 협력확대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대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대륙진출의 단절에 따른 ‘인공의 섬’을 벗어나 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21세기 한반도의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성숙화를 이룩할 수 있는 대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 환경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는 통일을 지향한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국의 협력 및 지지 또한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확보하기 위해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지역의 상호 이익의 증대 및 상호의존도의 심화를 꾀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을 지향하여야 하며, 상생의 전략으로서 ‘한반도-동북아 연계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동북아 연계 발전전략은 남북관계의 개선 및 성숙화를 전제로 하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역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이익의 창출 및 상호의존의 심화를 추구하여 이를 남북관계의 성숙화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활용하려는 ‘순환고리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동북아 연계발전전략에 따라 남북관계 성숙화의 요체가 되는 남북한 철도의 연결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과 21세기 동북아 지역발전의 순기능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미·일·중·러 등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및

해외교민 경제의 생산요소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회복과 남한경제의 재도약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공동의 경제생활권 형성,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상태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북한의 체계적인 개혁·개방 프로그램의 작성 등 발전전략의 수립과 강인한 추진 의지 및 노력, 한국의 경제적 역량 및 정치·사회적 추진 역량, 한반도 경제권의 전략적 가치,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의 협력과 참여, 국제사회의 협력과 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은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한층 성숙화시키는 물질적 기반의 구축과정으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상호신뢰 증대에 따른 긴장완화 및 통일비용의 경감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계획, 일본의 대륙진출 및 환동해 경제발전 계획, 러시아의 극동 연해지방 개발계획 등과 연계되어 동북아 인프라 구축 등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투자안전보장과 함께 역내 다자간 포괄적 협력의 필요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개발의 필요성

남북경협을 통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는 것은 남북경협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북한의 경제가 발전되고,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도 진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의 발전이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수반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도 포함되어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간의 경제통합이 목적의식적으로 추구된다면, 제도적 통합이 가능한 통일단계나 남북연합 후기단계 이전에는 남북경협,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산업협력이 가장 중심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한 경제간의 생산적 연관의 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두 경제의 생산적 연계의 확대란

두 경제가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경제가 비록 그 경제체제는 상이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확대 재생산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북한경제는 이러한 확대 재생산 구조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확대 재생산 구조 복구를 통한 북한경제의 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남북한 산업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제한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남한경제에 대한 종속상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형성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문제는 북한경제 개발이 남한경제,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북한 경제통합론은 정치적 통일 이전에 경제적 접촉의 확대에 의해서 남북한간의 경제적 관계가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정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론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남북한 경제는 적어도 상당기간 독자적인 경제로 존속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남북한 경제가 상호 생산적 연계가 확대되지만 상당 기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독자적인 경제로 존속한다면, 북한경제의 발전은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통합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은 대북 경제지원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감소시켜 남한경제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발전이 남북한 산업협력과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져 남북한의 산업연관이 심화된다면, 북한경제의 발전은 남한 산 자본재 수요의 증대 등의 형태로 남한 경제에 새로운 시장이나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이 통일한국, 혹은 통합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산업협력과 이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의 필요성은 크게 저감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북한 산업구조가 북한경제의 자원부존 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경제의 회복 혹은 성장이 경쟁력 없는 산업구조가 온존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일방적인 자원투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원의 낭비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막대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로부터 분리된 채 북한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현재의 북한의 왜곡된 산업구조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라는 내포적 공업화 전략에 기본적으로 기초하지만, 국제 가격과 동떨어진 가격 가격 하에서 상호 교역이 이루어지던 사회주의 경제권의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경제권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북한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불가피하며, 향후의 북한경제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북한경제의 생산요소 부존조건 하에서의 국제경쟁력에 기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발전이 북한 내의 비효율적인 산업부문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 산업협력 역시 북한경제의 생산요소 조건을 무시한 채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무시한 남북한 산업협력은 남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경제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과거와 같은 비효율적인 구조 하에서의 성장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이 북한경제의 개발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북한경제의 개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 시기 북한경제 개발의 비전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립경제'로 설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과 대내외 정치·경제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원유입이나 원조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추진이 불가능하고 자체적인 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어찌면 모순되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개발 전략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 북한 체제의 창시자와 결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경제정책이나 정책의 변화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결부되어 설명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수출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간산업의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요소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조달되어야 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여야 한다. 남한의 수출주도 경제발전 전략은 위의 요건 중 노동력의 공급을 제외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판매시장이라는 요건을 내부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요소들을 해외에 의존하는 발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상징되듯이 정책당국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정책당국은 경제성장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전략은 필연적으로 도입된 외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환의 획득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의 해결은 수출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수출산업의 지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은 남한이 수출주도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이 중화학 공업에서 일정 수준의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들 분야가 자체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하며, 제품의 판매시장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출전략산업의 육성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산업발전 정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주도 산업의 육성과 함께 북한이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을 통하여 구축한 산업기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북한경제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로의 진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북한경제가 생존하

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반 산업부문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산업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선택적 현대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정치·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이 자본재 등을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간산업의 선택적 현대화는 비록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적이고 이를 통한 현대화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산업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선택적 현대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 역량에 부합되는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대규모 자본과 오랜 기간의 산업화를 요하는 전통적인 산업발전 노선을 뛰어넘어 첨단산업을 통한 ‘단번도약’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 현실성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학 및 기술, 그리고 기술훈련이 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일정정도 성과를 거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경제의 발전속도를 앞당기고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제 3 장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비핵·개방·3000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 제3장

#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 1. ‘비핵·개방·3000 구상’의 주요 내용

#### 가.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개념 및 목표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상생·공영(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을 대북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제시하였다.<sup>32)</sup> 이는 북한의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하고, ‘상생·공영’한다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과정을 통하여 북미 간의 국교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남한도 경제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win-win’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상생·공영은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키워드인 ‘화해’와 ‘협력’을 ‘상생’과 ‘공영’ 지향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전략 구상으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유도, 북한의 개방,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경제 선진화를 지향하고 호혜적 인도협력의 추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32) 상생·공영 정책은 2008년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상생·공영은 대북정책의 명칭과 기조로 정해졌다.

또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화 과정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여 10년 내에 북한경제를 일인당 국민소득(GNI) 3천 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 구상이다. 다시 말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일종의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북 지원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과 안보불안이 해소 되어야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남북한 상생·공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추진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보편적인 발전 궤적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지원하여 하나의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남북 상생·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국민소득 3천 달러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sup>33)</sup>

이와 같이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정책목표는 북한에 대한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개발 지원을 실시하여 한반도에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체제의 개혁·개방이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의 5대 중점 프로젝트는 ▲ 경제(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교육(30만 산업인력 양성), ▲ 재정(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 자금 조성), ▲ 인프라(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 복지(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인 완전한 핵폐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바, 비핵화는 핵폐기 완료 상태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핵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선

33) ‘비핵·개방·3000 구상’과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8)을 참조.

결과제'로서의 북한 비핵화의 최우선적 중요성과 실질적 해결과정에서 경직되지 않은 접근법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생존을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 경제지원을 실시함. '비핵·개방·3000 구상'은 6자회담의 합의 이행과 상응해서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상황에 따라 비핵화 단계, 개방화·정상화 단계, 3000 vision 구현 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을 개방하고 정상국가화 하는 것이다. 즉,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단순한 개방이 아닌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은 '정상국가화, 시장경제 수용, 주민의 경제적 자율성 획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개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은 '정상국가화'를 의미한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 및 규범 즉,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4)</sup> 북한이 개방을 수용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미국·일본과 북한 간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정상국가'로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며,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문제, 인권문제 등의 진전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경제체제의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은 시장경제의 수용을 의미한다. 개방은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셋째, 경제생활의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은 주민의 경제적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는 '자율화'를 의미한다. 생산자로서의 신분과 조건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로서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확보해 나가는 '경제적 민주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북한

34) 임강택,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추진 방안,"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49.

주민의 1인당 GNI를 3000달러로 만든다는 것이다. 비핵화 및 개방을 통해 북한이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GNI) 3,000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20%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이는 달성하기가 쉬운 목표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1인당 소득 3,000 달러는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된 목표치이다.

북한의 1인당 GNI 추세는 1990년대 초반의 1천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적 대재앙을 겪으면서 500 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의 결과이다. 세계은행(WB)은 2006년도 북한의 1인당 GNI를 '905 달러 이하'로 추산하였는데, 2006년도 1인당 GNI 3,000달러 수준에 달하는 국가로는 마케도니아, 알제리, 이란, 그리고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1986~1987년에 3,000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다.<sup>35)</sup> 따라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 나. 5대 중점 프로젝트

'비핵·개방·3000 구상'은 5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sup>36)</sup>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을 100개 육성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내 5대 자유무역지대의 설치이다. 북한 동서지역의 균형개발, 기존 특구 활용도 등을 감안한 6개 권역 중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추가로 5개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6개 권역은 개성·해주, 평양·남포, 금강산, 원산·함흥, 나진·선봉, 신의주 등이다. 또한 북한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측 기업의 대북투자를 통한 해외 수출상품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품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KOTRA 평양무역관의 설치, 외국인의 대북 투자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35) 박형중 외,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87~88.

36) 윤덕민, “비핵·개방·3000 구상: 국제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KIEP 국내세미나 자료집, 2008, 4) 참조.

또한 북한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KECCA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의 30만 산업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인력에 대한 기술 및 시장경제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나 민간 단체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인력의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공동으로 해외시찰단을 구성해서 주요국의 경제발전 및 개혁·개방 사례에 대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북한의 기술인력 확대 및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설립된 기술교육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러한 기술교육센터를 북한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직업훈련센터의 추가적 건설은 남북 경협을 추진상황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KDI 및 KAIST 설립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국제적 개발지원 획득을 위한 공동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를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정부 일반회계 예산(2008년 256조 1,721억)의 1%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2조 5,000억원, 5년간 12조 5천억 원(140억불)의 기금조성이 가능하다. 민간부문 재원 조성도 확대해나가야 한다. 통일통장 개발, 통일펀드 조성, 중장기 통일채권 발행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다양한 재원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북한의 변화와 대외경제환경의 개선 여부(특히 미북관계 개선)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정식 가입하여, 동 기구로부터 최빈국에 대한 장기저리의 양허성 자금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치도 확대시켜야 한다. 중국 및 베트남 사례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 연 1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FDI 유입 잔액은 25~35%씩 증가하여, 연평균 13억~30억 달러의 유입이 가능(10년간 130~300억 달러)하다. 또한 향후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대일 청구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일 양국간 관계정상화 시 10년에 걸쳐 약 100~150억 달러 정도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이다.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개보수를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는 당초 2008년 착공시 2012년 완료가 예상되었는바, 대략 4-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경의고속도로 건설은 북핵 폐기의 진전 상황과 남북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일정 규모의 비료·식량 지원을 통해 북측 당국의 개발협력 추진여건 조성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부족의 근원적 원인 해소를 위한 농업협력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 남북당국간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의 낙후된 보건의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 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양묘·조림지원, 시급한 지역에 대한 직영조림, 현지 실태조사 및 기술교육 등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표 Ⅲ-1>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중점프로젝트

분 야	주요 내용
경 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경제·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과견(전직경제관료, 경영인)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년 300만 불 이상 수출 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 -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교 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 30만 북한 경제·금융·기술 전문 인력 육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 지원 -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 지원
재 정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World Bank 및 ADB 국제차관 - 남북교류협력기금(100억 달러: 10년간)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인프라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철도·도로 정비 - 400km 신 경의(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 대운하와 연계
복 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 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내용

### 가. 경제공동체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 동맹국 상호간에 무역 자유화를 비롯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의 경제정책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



간 차별국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을 통한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은 세계경제의 통합화로 인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지역별 자유무역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개별국가들이 경제통합에 적극 나선 이유는 시장 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提高) 즉,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역내 시장 통합을 통해 낙후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 주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데, △경제통합을 사회·경제적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 △경제통합을 경제일반에 관련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경제거래구조의 변화 현상으로 파악하는 근대경제학적 접근, △ 관세동맹의 관점에서 경제통합을 이해하며 정태적 효과분석을 중시하는 관세동맹 위주의 기능주의적인 접근 등이다.<sup>37)</sup>

첫째,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규범적으로 경제통합을 정의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개별국가들이 경제통합으로 이익공동체가 결성하게 되는 경우 개별국가들은 이익공동체 전체의 최적목표를 향해 동태적으로 접근해 나아가 한다는 규범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규범은 공동체 전체의 최적목표를 위해 개별국가의 목표를 상호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미르달(Gunnar Myrdal)을 들 수 있는데, 미르달은 경제통합을 국경의 제거라는 지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익공동체의 영역 확장이라는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대경제학적 시각에서 경제통합을 접근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틴버젠(J. Tinbergen)과 발라사(B. Balassa)를 들 수 있다. 틴버젠은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통합의 복합성을 강조하였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통합은 “차별적이고 제약을 두는 제도를 제거하고 경제교류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은

37)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서울: 법문사, 2002), pp. 16~19.

“기존 정책과 제도를 조정하거나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틴베젠이 인식하는 경제통합은 경제거래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정을 통해서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라사(B. Balassa)는 경제통합을 “과정(a process)이자 상태(a state of affairs)”라고 정의하였다. 동태적 개념인 과정으로서의 통합은 “다른 나라들 간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태적 개념인 상태는 “차별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라사(B. Balassa)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파악, 국가 상호간의 내부 결속도와 이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 정책에 따라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화폐·경제동맹(Monetary & Economic Union), 그리고 ▲ 완전한 통합(Complete Integration)의 다섯 단계의 경제공동체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sup>38)</sup>

첫 번째 단계인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가맹국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관세와 수입수량할당제(쿼터제) 등을 폐지하여 이들 지역 내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관세동맹은 가맹국 상호간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나 역외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세 번째로 공동시장은 가맹국 상호간 재화뿐만 아니라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세제도를 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네 번째로 화폐 및 경제동맹은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조정을 기도하여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각국 정부가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정책면에서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전면적 경제통합은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모든 사회·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단계를 지칭한다. 발라사는 이 단계에서 경제적 통합과 더불어 정치적 통합도 함께

38)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Fourth Impression, 1973) 참조.

이루어진다고 파악한다.

<표 Ⅲ-2> 경제통합의 단계

단계	시기	특징
1	자유무역지역	역내관세 철폐
2	관세동맹	역외공동관세 부과
3	공동시장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4	화폐 및 경제동맹	각국 정부 간 경제 정책 조정
5	전면적 경제통합	초국가적 경제정책기구 설치 및 운영

관세동맹이론은 역내외 국가간 관세의 차별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바이너(J. Viner)에 의해서 개발되고 미드(J. E. Meade), 립시(R. G. Lipsey) 등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이들의 이론적 접근 노력은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와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세동맹을 통해서 경제통합의 효과를 분석하는 시각에서 강조하는 것은, 경제통합을 형성할 경우 참여국가와 비참여국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관세에 의한 차별화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관세동맹의 영역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손병해는 경제통합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경제통합의 다양한 방법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sup>39)</sup> 첫째, 경제통합의 형성 주체와 통합의 동기에 따라서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은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국가의 정부간 합의에 의해서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경제통합 방식이다.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은 시장내에서의 이윤동기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국제적 차원의 경제활동이 집중됨으로써 지역경제권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통합의 형성 주체가 정부인 경우에는 제도적 통합이고 시장인 경우에는 기능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합추진의 목표와 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가에

39)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pp. 21~27.

따라 연방주의적 통합과 기능주의적 통합으로 구분하며,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형식으로 연합주의적 통합과 신기능주의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연방주의적 통합은 초국가적인 기구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기능주의적 통합은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경제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나. 경제통합의 유형

#### (1) 경제규모가 대등한 국가 간 경제통합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들이 관세동맹을 결성하여 각 회원국이 보유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 시장을 형성한다. 유럽지역의 초기 경제통합인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있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설립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관세동맹 결성을 결성하였다.

관세동맹 이외에도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수출입제한 철폐, 역외 여러 나라에 대한 공동 관세와 공동 무역정책 수행, 역내 노동력·용역·자본 이동의 자유 보장, 공동 농업정책 수립 등의 경제통합을 달성하였다.

<표 Ⅲ-3> 경제통합의 유형

내용 단계	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무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및 초국 가적 기구 운영
1	경제적 흡수통합 (동서독 경제협력)				
2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3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4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5	완전경제통합 (마하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 (2)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인 국가 간 경제통합

각 국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수출 및 투자를 실행하여 서로 교역함으로써 시장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경제협력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들 수 있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의 관세철폐 외에도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무역구제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FTA는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무역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으나, 경제협력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부문의 사양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 (3)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통합 (지역블록화)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에 따라 인접 국가들끼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경제협력 방식이다. 정치·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인접 국가들이 결집하여 연내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역외 국가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취함으로써 폐쇄적이고 유리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협력방식으로는 역내 관세율 인하 및 행정절차 간소화, 자원이동 및 기술이전의 확대 등이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이 대표적이 사례이다.

## (4)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 간 경제통합 (수직적 지역경제통합)

수직적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통합으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가 각국에서 크게 달리 나타난다.<sup>40)</sup>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가 획득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노동 시장의 공동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직적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경제적 통합과 함께 정치적, 문화적인 통합이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동서독 간 경제협력은 동서독 생산협력과 서독의

40) 심승진·김진, “수직적 지역경제통합과 구성국간 경제적 효과의 수렴·발산,” 『국제경제연구』, 8권 3호(2002), p. 98.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구성된다.<sup>41)</sup> 동서독 생산협력에는 동독기업이 서독기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동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서독으로부터 생산특허를 도입하여 동독에서 생산하는 경우, 서독이 동독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 서독의 대동독 재정지원에는 양 독일 간의 채무청산용 차관인 Swing, 내독교역 거래범위 내의 상업대부, 은행에 의한 재정차관 등이 있었다.

#### 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성격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경제통합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경제통합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이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의해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보다는 국가간의 산업기술,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 단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경제공동체 형성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각국의 경제정책과 경제활동 등에서 상호공통점이 많을수록 경제공동체 형성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한간의 경제공동체 형성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론 적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첫째, 이질경제체제의 문제이다. 남한의 경제체제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장제도, 사유재산권, 동기유인, 자유개방경제를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나,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집단적 소유권, 자립적 민족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발라사식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동일한 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간에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남북한과 같이 체제 이질적인 국가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주권의 문제이다. 고전적 경제공동체 형성이론은 통합주체의 주권문제를 무시한 이론이기 때문에 주권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질체제간의 공동체 형성에는 적용상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북한

41) 서우석, “통일 전 동서독의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토논단』, 231권 (2001), pp. 55~56.

42) 김영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33~135.

은 경제공동체 형성에 따른 경제적 실리 추구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잃게 되는 정치·체제적 안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경제수준과 경제규모의 격차문제이다. 경제공동체 형성은 경제활동에 있어 대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쟁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바, 경제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경우에는 경쟁의 불균형 관계가 이루어져 경제력 열등국가가 경제력 우위국가에 종속되기 쉬우며, 이는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경제공동체는 ▲이질적인 경제체제(경제제도와 관리시스템)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경제공동체이며 ▲경제력 수준이 현격히 차이나는 두 지역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경제공동체이며 ▲현재의 경제이념과 정책도 완전히 다른 두 지역 간에 이루어 내야 하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경제공동체는 남한의 절대적 우세, 북한의 절대적 열세 속에서 추진되는 경제공동체이면서도 한 경제체제가 다른 경제체제를 흡수하는 것을 배제하는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해소와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적 방안이면서 동시에 남북 경제관계의 밀접화를 통해 화해와 평화를 결정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형태의 공동체추진은 자칫 공동체 추진 자체의 무산은 물론 평화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는 통일을 지향하고 합의한 남북한이 경제분야에서 “국가 통일”에 상응하는 “경제통일”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의무적 성격도 갖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로 가야한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고 통일에 대해 합의한 한 만큼 경제분야 역시 통일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체제, 경제력 수준, 정책이 다르면 얼마든지 회피 할 수도 있는 다른 민족 국가간 공동체 형성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 민족 국가의 두 지역사이에 다루어지는 경제체제의 형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북경제공동체는 매우 어렵고 힘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적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제약요인과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남북경제공동

체의 형성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단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형태가 아닌 유럽연합(EU)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파급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인 통합까지 추구하는 점진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간의 제도적(institutional) 합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형성되는 기능적(functional) 형태가 병행되어야 한다. 즉,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요소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분야의 투자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북한의 지속적인 대내외 개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그림 III-1〉 참조).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상호간 경제협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력 격차나 체제상의 이질감 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sup>43)</sup>

이러한 제약요인을 감안한 남북경제공동체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경제가 확대 재생산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경제체제의 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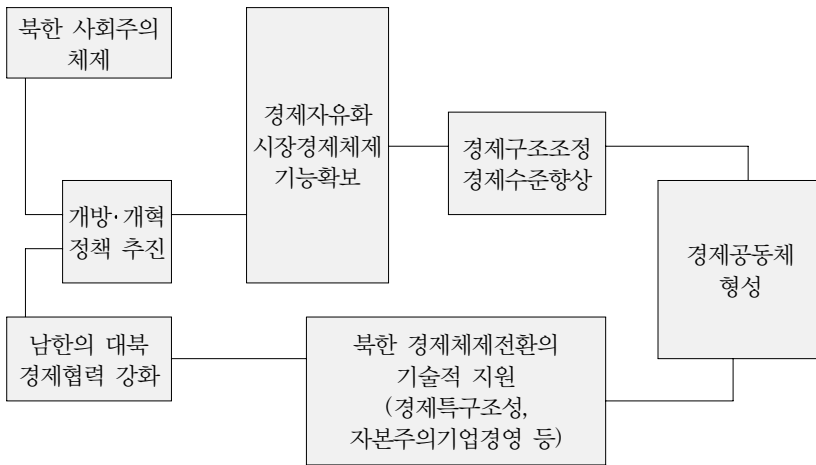
둘째, 남북경제공동체는 주변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과정을 통해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의 민족경제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

43) 위의 글, pp. 135~136.



<그림 Ⅲ-1> 경제공동체 형성 과정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우선, 남북경제공동체 추진과정에 있어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의 병행·조화가 필요하다. 제도적 통합은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통합의 조건과 형태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인 제도의 형태를 통해 실행하는 방식의 경제통합이다. 기능적 통합은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지역 내에서 개별 국가간 산업의 연계성이 높아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특정 부문에서 국가간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어 경제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형태의 통합을 지칭한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에는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공식적인 제도만 설치한다고 해서 경제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동시에 기능적 차원에서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경제공동체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둘째,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과 기존 남북경제공동체 논의의 연관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실현 가능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5대 과제 자체의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의 논의는 협력이 아니라 지원 차원의 논의이다. 주체의 문제는 논외로 되어 있고, 과정과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자원조달과 협력의 방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재는 양자가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남북경제공동체 논의의 성과를 나름대로 계승발전, 혹은 비판적으로 소화하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경제공동체에 기초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지향이다. 남북경협 의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대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대륙진출의 단절에 따른 ‘인공의 섬’을 벗어나 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의 주요 간선행로(main trunk route)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1,200km 반경 내에 7억 인구와 6조 달러 GDP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서울은 동북아 5대 도시, 즉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서울,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고, 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가 존재한다. 한반도 횡단철도(Trans Korea Railway; TKR)는 경의선 및 경원선의 복원과 더불어 중국대륙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TCR),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 몽고횡단철도(Trans Mongolia Railway; TMR) 등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는 ‘우리 민족끼리’만의 경제협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의 장’으로 만들면서 동북아의 공동체를 견인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지위와 역할

‘비핵·개방·3000 구상’하에서 남북경제공동체는 한반도의 비핵화의 진전 및 평화체제 형성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 체제보장,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체제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개혁·개방과 민주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남한의 통일방안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면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천을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화’(개방)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장기적으로 하나의 경제번영권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핵화 못지 않게 ‘개방·3000’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핵’은 북·미 양자협상과 6자회담의 다자협력을 통해 접근되는 사안으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방’은 한국 주도의 전략적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어 남북경협을 전술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원칙과 규범을 수용하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개방과 관련하여 3통문제 해결, 경제자료 공개, 국제 금융기구가 인정하는 상업·신용은행 설립 등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개념을 개방의 준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3천 달러는 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 구조가 구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3천 달러 달성으로 북한경제는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상당한 수준의 자립경제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중산층이 형성되는 수준을 말한다. 국민소득 3천 달러 실현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 산업인력 양성, 국제협력자금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의 ‘5대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인 것이다. 5대 패키지를 기본 축으로 북한의 비핵화·개방화를 통한 국내외적 환경 개선, 북한 스스로의 경제발전 의지, 남한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경제의 회생을 가능케 하며, 북한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통한 남북간 상생·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

이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가 남북관계 발전, 북한의 경제회생의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선결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경제의 정상적 발전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시켜 북한의 식량문제 및 경제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줌으로써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상생·공영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윈윈(win-win)관계를 추구해야 하며, 남북한 경제격차를 줄이면서 북한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의 경제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추진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즉,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략적 결단과 실천적 의지가 요구되며, 북한의 이러한 변화의지가 없다면 경제회복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결국, ‘비핵·개방·3000 구상’ 구상의 핵심은 북한의 경제자립을 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표 III-4> 참조).

<표 III-4>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의 단계적 추진

비핵화		추진체계	개방	남북경제공동체
1 단계	핵폐기 합의	5대 분야 패키지 착수 준비	부분개방	환경 조성기
2 단계	핵폐기 이행·실천	5대 분야 패키지 부분 가동	본격개방, 북한주도 개발, 계획경제 지양,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유도	확대, 발전기
3 단계	핵폐기 완료	5대 분야 패키지 본격 가동	완전개방, 단일경제, 시장경제체제 구축, 한반도 경제통합	통합기

북한의 개방과 3천 달러 실현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구상은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핵화와 남북경협이 신축적 연계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현 단계 핵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이외에도 식량지원, 비료

지원 등은 핵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화가 가져올 북한경제발전의 대내외 환경개선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 획득과 함께 개방을 통하여 외자유치가 가능한 내부 조건이 먼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북지원 5대 패키지를 북핵 문제 진전과 연계시켜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 연계전략으로 비핵화 1단계 즉, 핵폐기가 합의되면 대북지원 5대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준비에 착수하고, 2단계 핵폐기가 이행되면 5대 패키지의 일부 프로그램 가동에 착수한다. 그리고 3단계 핵폐기가 완료되면 5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 제 4 장

##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 제4장

#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 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의 기본 목표는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경제 공동번영의 Win-Win 모델 정착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지향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면서,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장기간 대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면서 경제발전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의존도를 제고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sup>44)</sup>

이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의 기본방향은 첫째, 남북한 성장 동력의 창출이다. 남북 간의 경제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 경제에 성장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통합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북한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한경제와의 통합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부존자원을 결합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이 완성될 때까지는 남한경제와 북한경제가 독자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각각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비교우위는 대륙으로의 육상 진출로가 열리는

44) 임강택,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17~122를 참조.



점을 활용한 물류산업을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러시아 에너지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에너지산업 역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경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북한 이전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조정 작업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IT분야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에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은 우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황폐화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작업과 남북간의 산업 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현대화시키고, 산업인프라의 남북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북한 인력을 재교육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의 두 번째 기본방향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이다. 경제통합의 부작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 특히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거나 특정지역에 경제통합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계되어야 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초기 단계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여러 지역으로 전략적 투자지역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이 남한기업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장소로만 이용되거나,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남한에서 선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북한지역 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축소하는 일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는 남한의 사양산업을 이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고가 확산될 가능성도 경계되어야 한다.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지역이 조기에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인프라와 같이 물리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작업과

함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의 세 번째 기본방향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심화, 확대하는 것이다. 남북경제가 통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은 국가경제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존관계의 심화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간의 경제관계가 단순한 양적 증대만을 추구할 경우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의존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일방적인 경제적 의존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격차, 경제관리 및 운용체계의 차이, 경제의식의 차이 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 북한의 인재양성 작업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경제가 상호의존도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공동변영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효율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친화적인 한반도 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의 네 번째 기본방향은 경협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다. 남북한 경제통합 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경제적 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 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안보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차원의 협력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동북아 교통망을 한반도 교통망과 연결하여 운행하는 교통 연계망 구축

사업과 에너지 공동개발 및 활용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단계를 1단계를 환경조성기, 2단계를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발전기, 3단계를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제통합기로 각각 설정하였다. 단계구분에는 남북경제통합의 질적 측면과 외형적인 제도적 변화가 고려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합의 각 단계에서 거쳐 가야할 이행과정과 해결과제를 모색하였는데, ①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법·제도적 협력수준과 ② 물류·인프라의 연계 수준, 그리고 ③ 남북한간 생산요소의 교류 및 협력 수준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남북한간 법·제도적 협력수준은 남북한 경제통합이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형성을 의미한다. 법·제도적 경제통합은 이질적인 경제체제 및 경제운용 방식을 해소하고, 상호간의 결속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상호간에 합의 및 협약을 바탕으로 무역·통화를 비롯한 경제 각 분야에서 공동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sup>45)</sup> 따라서 남북한은 지난 2000년에 합의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4대합의서’를 기점으로 당국간에 합의된 사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남북한 경제관계의 예측 가능성, 지속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남북경협과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화는 남북한 모두의 정책적 측면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음으로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남북한간의 제도적 협력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지향적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당국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외형적인 진전을 보이더라도, 합의된 법·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물류·인프라체계의 연계 수준은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45) 김영윤,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p. 262 참조.

단일경제권 형성을 위한 물리적 통합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는 물자 수송을 위한 운송·교통망 연계와 함께,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복구를 통한 남북간 산업인프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각 단계를 거쳐 가면서 물류운송의 확대와 정보통신 인프라의 통합이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물류·인프라체계의 연계는 단절된 육상 교통망 연결, 북한 항만 및 기타 운송시설 보완, 교통·물류시스템의 표준화, 통신인프라 현대화 및 통신망 연결 협력사업 등으로 연결되어 추진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 생산요소의 교류 및 협력 수준은 경제통합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남북경제통합의 진척에 따라 산업간에 유기적 연계가 심화되고 경제적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남북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노동, 자본, 기술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부분적 이동이 추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됨으로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협력사업의 고도화가 가능해지는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sup>46)</sup> 이와 같이 생산요소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초기·확대·심화의 각 단계를 넘어서게 되고, 심화단계에서는 기능적 경제통합의 고도화와 함께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됨으로서 금융 및 관세분야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틀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이 ▲ 법적·제도적 협력, ▲ 물류·인프라의 연계, ▲ 생산요소의 교류 및 협력의 세 가지 측면이, 비록 일치한 수준은 아니지만, 동시에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에서 제도적, 인프라적, 기능적 연계의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분야가 상호 보완 및 촉진의 기능을 하면서 경제통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1단계인 환경조성기는 법·제도적 합의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물류·인프라체계의 연계가 형성되고 생산요소가, 제한적이지만, 이동이 가능한 시점으로 파악한다. 2단계인 남북경협 확대기는

46) 김영윤은 ▲북한 교역총액에서 대남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 총액에서 남한의 대북투자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 남한의 투자대비 북한의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경제통합 이행 단계의 지표로 제시하였다. 김영윤,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pp. 283~284.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프라체계의 구축을 바탕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남북한간의 산업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3단계인 경제통합기는 금융 및 관세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 각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동의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물류·인프라체계가 단일경제권 직전의 수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 2. 주요 수단 및 내용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남북한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 목표, 의식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는 주로 정부의 대북정책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서 통일과정의 중간 단계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많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수단은 경제적 관점에 국한시키는 것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정치적 수단

정치적으로 대립관계가 유지될 경우 경제부문의 협력을 위한 국가 간의 합의는 무용화되기 쉽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다. 특히 과거 전쟁이나 극단적 대결의 경험이 있는 지역의 역사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분쟁의 경험이 있는 국가 간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치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쟁 경험이 있는 국가사이의 경제협력의 목표는 ‘불신과 대결의 상태’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상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국가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은 의존성(dependence)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sup>47)</sup> 첫째, 정치적

분쟁이 종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합의 도출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국가간의 정치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협력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경제제도 도입을 포함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채택과 체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국가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효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 의사소통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직체계의 형성, 과학기술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분쟁의 경험이 있거나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국가 간의 경우에는 정치분야의 평화프로세스가 정제되면 경제부문의 협력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체제 공존 및 안전보장존 및 안최소한의 신뢰장치를 남북한 당국이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 조성,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초한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국간 회담을 활성화하고, 상호 교류·협력에 장애요소가 되는 법적·제도적 요소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상회담이 남북한 간의 현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논의,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사항은 북한내 그 어떤 법과 규정보다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합의사항의 이행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국방장관회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당국간 회담도 상호 신뢰구축을 물론, 향후 남북연합 하에서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남측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형법 및 노동당

47) 임강택,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p. 106.

규약의 일부 요소가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교류·협력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호 법과 규정을 개선·개정하는 것도 정치적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제공존과 안전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 정착이다. 남북간에는 이미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부속 합의서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행 기구로서 분야별 공동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본 경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군사공동위의 실질가동을 통해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몇 가지 가시적 조치들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방예산·전력수준·군수생산 등 각종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특정규모 이상의 군부대 이동 및 군사훈련에 대해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군사훈련시 상대방의 참관단을 초청하여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국방장관 또는 야전군 사령관급의 직통전화를 가설하는 동시에 공동위기 관리센터, 비무장지대의 조기경보 감지체계 등을 설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류를 통해 남북한 군지도부간의 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민족공동체의 공동안보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및 제도화와 함께 남북한 당국은 조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것도 평화체제의 조기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보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 북한과 미국·일본 및 서방권과의 관계개선 ▲ 북한체제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이다. 현재 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체제유지로서 남북연합의 추진이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남한 당국은 분명히 북측에 인식시켜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나. 경제적 수단

경제공동체 형성의 목적이 시장 확대를 통한 자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있느냐, 아니면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있느냐에 따라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 확대를 겨냥한 서구형 경제통합에서는 경쟁 촉진을 통한 기술적·경제적 이익 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경제구조나 발전단계가 유사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 참여국들의 경제구조나 발전단계에서 격차가 클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일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을 통해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가에게도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합국가의 경제구조가 보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에는 체제의 이질성과 큰 경제격차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단계와 부존자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구조의 이질성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북한은 경제적 보완성과 잠재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남한기업들이 인건비와 건물임대비의 과다로 인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이 풍부한 인력과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은 앞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는 남북간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은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경제구조의 유사성을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통합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 기대 이익으로는 시장 확대에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 심화를 통한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개선 촉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는 기대하는 이익에 있어서 남북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됨으로써 황폐화한 경제를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 양측은 경제통합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통합으로 인한 기대 이익은 경제통합이 진척되어 남북 경제구조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한 당국은 경제공동체에 따른 단기적 기대이익과 중장기적 기대이익을 북한 당국에 설명함으로써, 북한측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사회·문화적 수단

경제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교, 언어, 생활양식, 가치기준 등 사회·문화부문에서 공통성과 동질성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클 경우 국가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언어의 공통성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 역시 경제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문화적 공통성을 공유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없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지만, 60여년이 넘는 분단과 이질적인 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은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전쟁과 반목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교류·협력 확대

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의 확대이다. 남북한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상호불신과 편견 및 문화적 이질성 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동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족 공통의 원형과 전통문화 등을 확대·보급함으로써 한민족의 사회·문화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경제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한의 체제수렴 또는 통합을 이루는데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행이 용이한 분야와 민족동질성을 제고시키는 데 유리한 분야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의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선 이질적이고 독립된 체제간의 교류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자본주의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라는 현실적인 차별성을 전제로 해서 서로의 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운데,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기 쪽의 이념이나 가치, 체제의 우월성 등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공동의 관심사 또는 상호보완성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호혜적·개방적 자세로 상대방의 사회·문화적 장점을 이해하거나 수용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질적인 요소를 점진적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사의 공동연구, 스포츠 교류, 음악·예술단의 상호 방문 등 비정치적 또는 이념적 요소가 가급적 배제된 분야에서부터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는 자율성을 원칙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간의 인적 왕래 및 서신교환 등의 확대 또는 제도화는 직면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물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자율성 강조가 정부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문화 교류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은 분단 반세기 동안 고착되었던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남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 교육 및 학술분야 ▲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간의 교류 ▲ 문화예술(대중예술 포함) 분야 ▲ 언론기관간 교류 ▲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 교류·협력사업이 발전된다면, 이는 남북연합의 조기실현은 물론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건설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3.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본구도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구상은 남북관계와 한국경제의 상황, 한반도 주변정세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현실성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에는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완비되어 있지도 않고, 대내외적 환경에 있어서도 가변적 요소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의 추진은 여타 부문의 협력수준 및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에도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도 상당기간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을 감안하고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정치·군사적 안정 및 신뢰기반 조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병행,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이 정치·군사적 상황이나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지금까지의 경험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단계에서 남북

경협은 한반도 비핵화와 맞물려 있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대북정책과의 조율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추진은 남북관계의 수준, 한반도의 주변정세 및 대외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협력사업의 선정 및 그 추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적 추진전략은 시기별로 추진되어야 할 협력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예측하고, 남북한이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른 각자의 준비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sup>48)</sup>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북한의 협조 없이 남한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정치·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일정한 단계를 설정하고 해당 단계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한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해당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단계별 전략에 기초하여 남북경제공동체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sup>49)</sup>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의 단계적 추진계획의 기본 틀은 한반도 비핵화와 연관되어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IV-1〉 참조). 1단계는 핵 신고 완료 및 핵 폐기 로드맵 합의 단계로, 남북경협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는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단계로서, 남북경협도 이러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개선과 안정에 따라 확대·발전될 것이다. 3단계는 북한 핵의 폐기가 완료되는 단계로서,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함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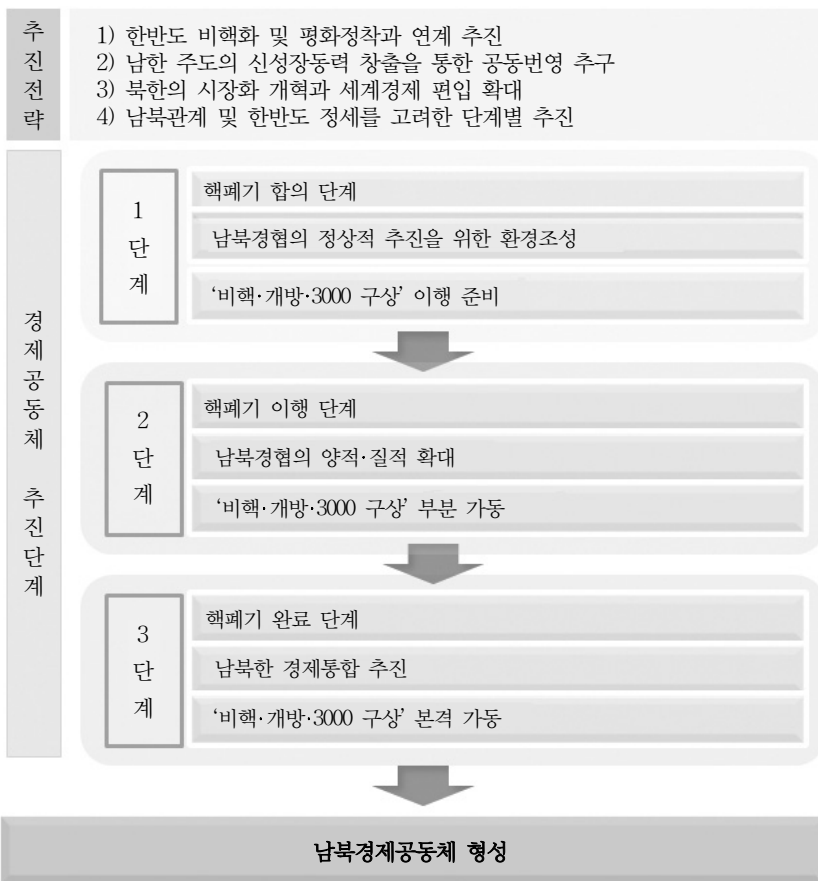
각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단계는 핵 신고 및 폐기 로드맵 합의 단계로, 남북경협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

48)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년)”을 수립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49) 남북경협의 장기 청사진이 마련되고 단계별 과제가 구체화된다면, 개별 민간 기업들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를 원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경협의 기반확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해 핵시설 불능화와 검증가능한 핵신고 및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 6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문이 선언되면, 미·북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상호신뢰가 한층 강화되고 남북관계 전반의 제도화 수준이 진전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당국간 회담(총리급 회담, 경제공동위원회, 각종 실무협의 등)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사업을 비롯한 기존 사업과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는 한편,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행 준비를 위한 남북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림 IV-1>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및 단계 설정



1단계에서의 남북간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1단계 본격 가동, 2단계 부지조성 작업 착수 △3통문제 해결 △경협과 연계한 SOC 제한적 개보수 및 현대화 △소규모, 제한적 산업협력 추진 △시장경제 관련 교육, 훈련 지원 △북한에 대한 구상 설명 및 협상 제안 △비핵화 이후 본격적 지원 의지 과시 및 국제사회의 지지확보 등이다.

2단계는 핵 폐기 이행 단계로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우선, 북핵문제는 6자회담 차원에서 급진전됨에 따라 북한 핵 관련 시설 및 무기 등에 대한 신고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핵폐기를 위한 합의사항들이 이행되는 단계이다. 이와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유도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미 및 북일 수교협상이 시작되고, 북한의 세계은행, IMF, ADB 등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기존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을 통해 남북한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고, 산업별·지역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남북한 합의하에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비핵·개방·3000 구상’의 부분 가동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남북협력을 위한 중점과제로는 △개성공단 2단계사업의 본격 가동 △추가적 경제특구 개발 및 거점 산업단지 개발 △북한지역의 SOC 투자범위 확대 △중화학공업 등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대북 진출 시작 등이다.

3단계는 북핵 폐기가 완료되고 남북경제통합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6자회담의 순조로운 이행 및 합의사항의 준수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함께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북미 및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해당기구로부터의 양허성 차관 및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단계이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근축과 주변국 및 유엔의 지지와 승인하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 남북경협은 산업협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남북경협-동북아경협이 연계되고 남북한 공동시장이 형성되며,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중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이다. 남북경협의 주요 과제로는 △첨단 및 자본집약 분야의 대북 투자 활성화 △개성공단의 완전 가동 △제3의 경제특구 부분 가동 △북한 SOC

전면 개발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 체결 등이다(<그림 IV-1> 참조).

<표 IV-1> 남북경제공동체 단계별 추진시 고려사항

	환경조성 단계	확대·발전단계	통합단계
북핵	일괄타결 방안에 따른 핵폐기 합의	- 핵폐기 이행	- 핵폐기 완료
대외 관계	-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 국제사회 일원 편입 유도 - 국제금융기구 가입 논의	- 국제사회 참여 확대 유도 - 북미, 북일 수교협상 시작 - 국제금융기구 가입 절차 착수 및 가입	-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 국제금융기구 자금 유입 본격화
남북 관계	- 상호신뢰 강화 - 남북관계 제도화 진전 - 당국간 회담 정례화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착수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남북 경험	- 기존 사업 및 기합의 사업 이행 -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준비 및 남북간 협의	- 상호 의존성 확대 - 산업별, 지역별 협력 - 산업표준화 협의 - 북한개발 종합계획 확정 - '비핵개방 3000 구상'의 부분 가동	- 산업협력 고도화 - 남북경협-동북아경협 연계 - 남북한 공동시장 형성 - '비핵개방 3000 구상'의 본격 가동
북한 개방	- 기존 특구중심의 개방 확대 - 외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및 외자도입	- 개혁·개방 확대 - 시장경제체제 도입 확대	- 전면적 개혁, 개방 - 시장경제도입 본격화
중점 사업	-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 개성공단 1단계 본격 가동, 2단계 부지조성 작업 착수 - 3통문제 해결 - 경험과 연계한 SOC 제한적 개보수 및 현대화 - 소규모, 제한적 산업협력 추진 - 시장경제 관련 교육, 훈련 지원	- 개성공단 2단계 본격 가동 - 추가적 경제특구 개발 및 거점 산업단지 개발 - SOC 투자범위 확대 - 중화학공업 등의 기간산업 대북 진출 시작	- 첨단 및 자본집약 분야 투자 - 개성공단 완전 가동 - 북한 SOC 전면 개발 -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 체결





# 제 5 장

## 남북경제공동체 단계별 추진방안



## 제5장

# 남북경제공동체 단계별 추진방안

### 1. 핵폐기 합의단계: 남북경협을 정상적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제1단계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행 준비단계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이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검증체계, 핵폐기 시기와 방법 등이 합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 가. 경제

##### (1) 기존 경협사업의 지속 및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 준비

1단계에서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은 민간경협(개성공단, 금강산 및 개성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남북협력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6자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을 원활히 제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회담의 재개를 통해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북측의 이해를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남북경협 확대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경협의 기존 합의 사항을 검토하여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 등을 구분하여 ‘승계, 수정, 폐기’의 세 범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시행을 준비하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중점사업의 분야별 사업 대상을 하나씩 점검해서, 2단계에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향후 ‘비핵·개방·3000 구상’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제도적 연계수준 제고

1단계인 남북경협 환경조성기에 추진될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제도적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주로 이루어지던 경제교류가 정부당국간에 공식적으로 협의된 틀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이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당국간에 합의된 사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각 부문별 사안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남북한 간의 부문별 제도합의에는 예측 가능성, 지속성, 효율성이 보장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경제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 변화, 새로운 경제전략의 추구 등과 같이 북한 내부의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의 제도적 연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협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합의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제도적 연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는 ▲ 상사분쟁 조정기구의 설치, ▲ 경제공동위원회 및 연락사무소 설치·운영, ▲ 남북한의 남북경협 제도 및 관련기구의 정비, ▲ 남북경협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동노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북한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도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30만의 산업인력 양성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산업인력 양성의 기본방향은 북한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성장과 이익창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인력의 양성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발전 및 외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인력 양성 지원은 주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이미 건립되어 있는 개성공단의 기술교육센터를 개설·운영해야 한다.<sup>50)</sup>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정부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한 기술인력 양성협의회’를 설립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북한측 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기의 교육은 주로 경공업 분야에 중점을 두되, 단계적으로 중화학공업이나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 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4) 북한내 지하자원 공동 조사

1단계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북한내 자원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내 자원매장량 및 남한산업의 천연자원에 대한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유력한 경제협력 사업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원공동개발이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프로젝트라는 점과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관계가 현재보다 제고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제1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자원공동개발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우선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조사, 매장량 조사, 광물자원의 경제성 검토 및 사업별 소요자본 추정 등과 관한 기본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 개성공단에는 19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자하여 연간 교육인원 4,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lt;표 V-1&gt;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광 종	품 위(%)	단 위	매 장 량		수입 의존율(%)
			남 한	북 한	
금	금속(Au 100)	천톤	0.030	1~2	98.49
은	금속(Ag 100)	천톤	1.175	3~5	87.54
구리	금속(Cu 100)	천톤	41	2,155	100
납	금속(Pb 100)	천톤	305	6,000	99.96
아연	금속(Zn 100)	천만톤	0.044	1~2	100
철	Fe 50	억톤	0.197	20~40	99.49
중석	WO3 50	천톤	100	600	100
몰리브덴	MoS2 50	천톤	10	1~3	100
망간	Mn 40	천톤	123	100~300	100
니켈	Ni 3	천톤	-	10~20	100
흑연	각 급	천톤	1,837	6,000	99.36
석회석	각 급	억톤	65,478	1,000	0.65
고령토	각 급	천톤	74,357	2,000	10.07
활석	각 급	천톤	5,451	600	54.73
석면	각 급	천톤	511	13	-
형석	각 급	천톤	345	500	100
중정석	각 급	천톤	712	2,100	99.84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	30~40	100
무연탄	각 급	억톤	3,353	117	57.09
유연탄	각 급	억톤	-	30	100

주: 수입의존율은 남한의 것임.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 매장량 2005』; 한국산업은행, 『신북한의 산업』(2005); 『북한조선중앙연감』 참조.

## 나. 재정

북한의 1인당 GNI를 10년내에 3,000달러로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1인당 GNI를 500달러 수준으로 가정시 1,237~1,299억 달러, 1인당 GNI를 1,000달러 수준으로 가정시 약 836~930억 달러 수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V-2> 향후 10년간 국제협력자금 조성 규모(추정치)

(단위: 억 달러)

구 분		1인당 GNI(가정)		
		500달러	1,000달러	
국제 사회	지원 (ODA)	국제금융 기구	18~108	18~108
		기타기구	10~57	10~57
		일본	50~124	50~124
		기타국가	36~59	36~59
		소계	114~348 (173~305)	114~348 (148~349)
	국제민간자 본	FDI	97~261	123~330
		상업차관	35~86	44~438
		소계	132~347	167~438
	계		246~695 (305~652)	281~786 (315~787)
	남한	남북협력자금	144	144
민간투자		65	65	
소계		209	209	
총계		455~904 (514~861)	490~995 (426~996)	

주: 1) ( )는 ODA자금을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추정한 수치.

2) 국제사회 지원의 기타국가의 경우 미국(4~9억 달러), EU(12~30억 달러), 중국(20억 달러) 등임.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10년간 약 400억 달러 상당 국제 협력자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하여, 관련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차관 및 국내의 민간투자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sup>51)</sup> 자원조달의 기본방향은 북한개발 투자에 소요되는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제자금 조달 확대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개발에 따른 자금규모를 감안할 때 국제협력자금의

51) 북한이 IMF, WB, ADB 등 국제기구에 정식 가입하면 최빈국에 대한 장기저리 양허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는 중국 및 베트남 사례 참조시, 북한이 연 10%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경우 FDI유입잔액은 25~35%씩 증가하여, 연평균 13~30억 달러 유입이 가능(10년간 130~300억 달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일관계 개선 관련 자원자금도 양국간 관계정상화시 100억 달러 내외 수준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이 핵심과제이며, 수원국의 노력에 따라 자원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협력 하에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 (1) 북한의 경제통계 정비

IMF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에 대한 통계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국제금융기구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 그리고 기술지원외, 수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하는데 이는 수원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보다 나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다.<sup>52)</sup>

또한 통계가 중요한 것은 초기 분석의 중요성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는 중동부 유럽과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체제전환 초기단계에서 빈곤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개별국가와 접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여자는 정부가 빈곤수준을 관리하고 빈곤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3)</sup>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통계자료는 초기에는 민감한 정부 및 군사부문을 제외한 비정치적인 일반 경제와 사회적 통계 등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정부관련 및 거시경제 통계 공유를 요구한다. 주요 통계자료로는 일반주민의 영양상태 등 가구조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통계로부터 경상수지, 무역규모, 외자유치규모, 공식·비공식환율, 대외부채 등도 국제금융기구에서 중요시하는 통계들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간 협의하에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북한 내부의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북한경제통계 정비 작업에 대한 지원이다.

이미 남북한 간에 경제협의기구로 합의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산

52) 세계은행의 경우 이런 분석활동은 'Economic and Sector Work (ESW)'라 불리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쏟고 있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세계은행의 ESW 임무가 자신들의 경제개발 노력에 최대의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수원국 정부,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53) 가구별 생활수준에 관한 설문조사와 다른 도구들이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사회적 지원의 대상을 보다 잘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후자의 경우 체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세계은행은 정부가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했다. 이것이 정책 분석 및 분석지도에 근거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대상 선정의 기초가 되었다. 임을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개입』(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44.

하의 경제제도분과위원회 등의 가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통계 정비 작업은 초기단계부터 세계은행이나 IMF 등과 협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가입에 유리하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지여론을 확산하고 가입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가 IMF, 세계은행, ADB 등의 연차총회 활용, 국제금융기구 집행부 설득, 미국·일본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북한의 조기가입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 (2) 북한의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의 작성 지원

‘빈곤감축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는 특정 국가가 IMF나 세계은행 등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해야 하는 포괄적인 경제개발 계획이다.<sup>54)</sup> PRSP의 작성은 IMF의 조정차관(adjustment lending)과 세계은행의 양허성 차관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고서가 되었으며, PRSP의 실행을 위해 IMF는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를, 세계은행은 PRSC(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를 새로 도입하였다.<sup>55)</sup>

이와 같이 PRSP 제출이 세계은행과 IMF 등으로부터 부채경감 및 양허성 차관을 제공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됨에 따라 북한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른 국제기구 가입 및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PRSP 작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PRSP와 같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북한의 전문관료나 정책결정자들의 역량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북한 스스로 단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PRSP 수립능력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의 1970년대 경제개발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PRSP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관점에서 PRSP를 작성하는 것이 남북경제통합이나 공동의 이익에 보다 유리하다는 점에서 남북협력

54) PRSP를 가장 성공적으로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국가로는 베트남을 들 수 있다.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 전략’(The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은 기존의 국가개발전략을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55) 윤대규·임을출, 편저,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p. 297.



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sup>56)</sup>

### (3)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인도적 지원 실시

당면한 북한의 경제난 및 식량난 등을 감안할 때 식량 및 비료 등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북 식량지원 등의 긴급 구호성 지원은 북한주민들의 당면한 고통을 경감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식량 및 비료지원에 대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지원전략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 계획은 3~5년 정도의 중기전략 하에 식량 및 비료의 지원 규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원규모나 조건 등을 북측 내부의 개혁조치와 연계하여 북한 당국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개혁·개방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인프라

대북 인프라 개발지원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당면한 남북경협사업과 연계된 북측 인프라에 대한 우선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일괄타결에 따른 대북 에너지 및 전력 지원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상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에너지가 가지는 전략적 특성 때문에 순수한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정치적 상황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에 시장경제방식에 근거한 상업에너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남북 에너지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려운 중대한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56) PRSP 작성 과정은 북한 스스로 당면한 거시경제 및 생산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남한 입장에서도 북한의 PRSP 지원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자유로운 시장과 안정적인 이윤회수 환경은 1차적인 선결요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변화 추이가 낙관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초기단계에서 남한의 민간자본과 기술이 진출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보다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기 및 에너지 관련 교육훈련 등 비실물분야의 협력사업 전개를 통해 남북 에너지부문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음 단계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 에너지부문의 시장경제식 상업에너지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우선, 북한의 핵개발 중단 합의에 따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중유 지원의 종료를 위해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분담분을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에너지 공급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 (2) 남포항을 비롯한 남북경협 거점항구 현대화 지원

남북경협과 관련된 거점항에 대한 현대화 사업 지원이 우선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남북경협과 관련된 대부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남포항 현대화 사업이 가장 우선과제이다.

남포항은 남북교역 화물수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항만으로 개발하여, 이후 서해안의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교역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컨테이너용 크레인 등 하역장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후 추가선석 설치, 배후수송로 확충,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남포항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단계에서는 남포항 이외에도 남북경협의 주요 항구로 활용되고 있는 단천항 및 라진항 등의 하역시설 지원과 항만시설 정비작업 지원 등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 (3) 개성공단 인프라 정비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은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 본단지 분양의 경쟁률이 2:1에 이르러 2단계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북핵문제 개선에 따른 신규수요와 해외이전수요의 개성공단 전환도 예상된다.<sup>57)</sup> 그러나 2007년말 개성공단 1단계 사업(330만㎡ 부지의 기반시설 및 분양)의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작업은 2007년말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1단계 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을 감안해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에는 1단계 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 업종을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공단으로 조성하고 해주 및 수도권과 연계한 생산기지로 개발해야 한다. 2단계 개발규모 설정시 1단계 기반시설로서 건설된 전력망의 공급 효율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은 1단계 공급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1단계 사업의 전력수요는 17만 kW로 추정됨에 따라 기존 송전탑을 활용한 최대 공급가능 전력량 40만 kW를 고려할 경우 23만 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력공급 여력을 감안할 때, 2단계에서 약 660만㎡(200만평)의 추가개발이 가능하다.<sup>58)</sup>

물류대책으로서 기존 교통망 외에 김포반도 북단-개성공단 연결도로를 확충하고 2009년 이후에는 자유로와 김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일산대교)을 활용해야 한다. 전력, 용수, 통신 등의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은 변전소와 변압기 증설을 통해 2단계 전력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용수는 남측 광역상수도 공급 또는 임진강 취수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통신은 공단내 5만회선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립하여 별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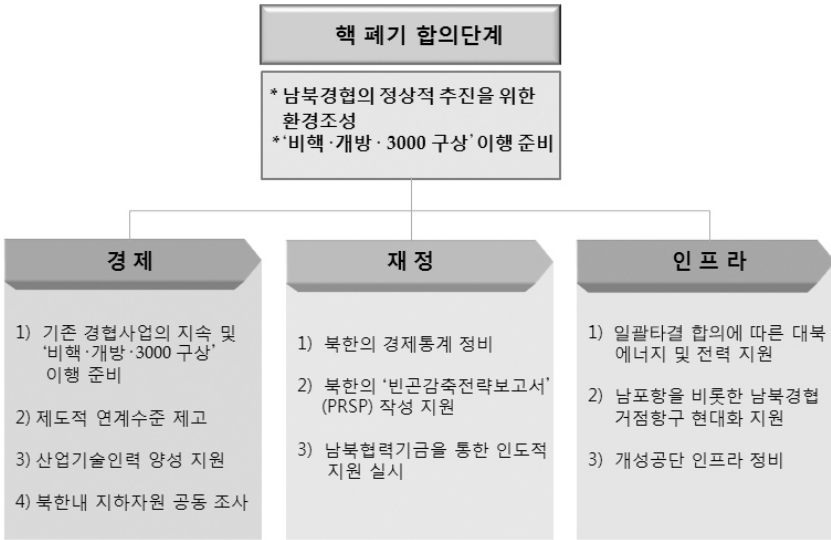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노동력 확보 및 숙소대책이다. 1단계 노동력수요는 총 11만 5,000명(공장부지 215만㎡(65만평)기준)으로 추정된다. 2

57) 현재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개성공단으로의 수요전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58) 공단 약 396만㎡(120만평) 내외, 생활상업구역은 66만㎡(20만평) 내외, 관광구역(골프장 포함)은 165만㎡(50만평) 내외일 경우 전력수요가 23만kW 이내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 노동력수요를 1단계 업종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최대 15만명(공장부지 264만㎡(80만평)기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1단계 사업 노동력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향후 숙소건설 및 운영비용은 북측과 입주 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V-1> 참조).

<그림 V-1> 제1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 2. 핵폐기 이행단계: 남북경협의 양적·질적 확대

제2단계는 북핵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이러한 진전 상황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의 착수와 남북경협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는 시기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적 과정인 북핵폐기의 이행·실천 과정에 진입한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 유인 전략으로 미국이 1990년대 구소련 지역 여러 국가의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목적으로 Nunn-Lugar 법안에 입각하여 적용했던 비확산 프로그램인 '협력적 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을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미·북간 우호적 협상국면 속에서 6자회담의 동북아 안보협력회의로의 전환이 논의되면서 남북한 군축 문제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제안 등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되고, ‘북방경제’를 통한 한국경제의 활로개척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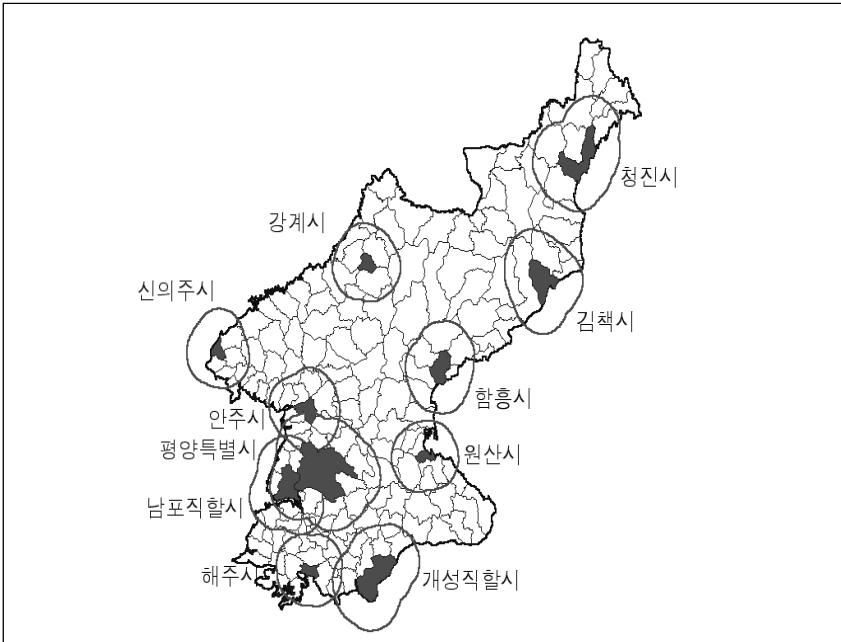
## 가. 경제

### (1) 개성공단 확대 발전 및 경제특구 추가 개발

투자거점지역의 설정 및 대북 투자사업 확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대북 직접투자는 투자거점지역의 설정을 통해 일정 지역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의 현재 산업 인프라 및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전 지역에 걸친 산발적인 대북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또한 매우 낮아 남북한 경협의 초기단계에는 부적절한 조치이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기업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남한전용 공단형태의 투자거점지역을 확보하여, 북한당국의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와 인프라 구축과 같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남북한 산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당국이 이미 개방을 결정한 지역인 개성과 신의주 등의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기업의 직접투자가 어느 정도 성사된 이후에는 산업기반과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북한의 해안공업지구와 인접한 항만 인근에 소규모 남한 공단을 조성하여 대북투자와 남한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양성하여 투자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V-2>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별 중심도시 현황



(2) 북한의 수출기업 양성 지원

2단계에서는 북한의 수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북한의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는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대북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대북 투자는 수출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우선 육성해야 한다. 이후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기·전자·중화학공업 부문의 수출기업을 육성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한국 및 외자 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수출 및 투자 증진을 위해 남한의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기존 남한의 수출 서비스망을 북한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양에 KOTRA 평양무역관을 개설하여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관련 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적극 지원해나가야 한다.

### (3) 북한경제개발 전략 공동 수립

‘비핵·개방·3000 구상’은 남한 주도의 북한 경제개발론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과 전향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남북한 원인이 가능하며, 북한 경제회복의 속도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남한 이니셔티브의 북한개발론을 이제 북한 스스로 주체적으로 변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북한의 개혁적 조치는 앞으로 ‘북한식 경제건설’ 또는 ‘북한식 수출입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2단계에서 5대 패키지를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가야 하며, 이와 같이 남한의 협력아래 ‘북한식 경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최소한의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단계는 남북경제협력의 질적, 양적 확대기로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경제통합의 기반 조성이다. 대북정책의 최종목표는 통일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요구로 나타나며, 남북한 경제협력도 이러한 대북정책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목표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양측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심화시켜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에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또는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취해야 한다.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북한이 중국 또는 베트남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유도·지원한다는 것은 남한측이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변화 또는 체제붕괴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며, 북한 스스로 이를 선택하고 실시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통한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실질적 가동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정책·조세 및 금융정책·대외통상정책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 위원회를 통해 ‘남북공동변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남북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4) 산업협력 확대: 대북 투자 활성화

남북한 산업협력의 확대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산업정책에서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 산업협력은 기본적으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협력과 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추진되는 것이 남북한 경제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저렴한 공업용지의 공급이 용이하며, 지리적으로 러시아 및 중국의 동북 3성과 인접하여 동북지역의 시장진출이 용이하다.

반면 남한은 산업기술 수준이 고도화되어 있고 자본 및 경영노하우가 풍부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한의 기술·자본·R&D·기업경영능력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자원 및 공업용지가 상호 결합하는 형태로 남북한 분업구조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공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지역 배치를 통한 경쟁력 회복과 남한내 지식·고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집중개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히 비교우위에 입각한 남한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또는 수직적 분업체계는 북한측의 반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다. 물론,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공업위주의 구조로 심각한 가동률 저하와 설비의 낙후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중 경쟁력이 부족한 설비와 또한 향후 남북한에 있어 중복적인 투자가 된 부문에 있어서 경공업 등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 정보업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문에 대한 남북한 간의 공동발전과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남북한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형태는 ▲ 합작 및 단독투자를 통한 자본협력 ▲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등의 기술협력 ▲ 경영관리인력 및 기술자 파견 등의 인력교류 ▲ 공동개발을 통한 자원협력 ▲ 판매 및 유통분야에서의 마케팅 협력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협력으로 이전까지 단순교역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남북경협에서 탈피하여 합작



및 단독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면 기술제공 및 공동연구개발과 같은 기술협력도 활성화될 것이다.

#### (5) 북한내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내 자원의 공동개발 추진이다. 1단계에서 추진된 자원공동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경제성과 상호보완성이 높은 사업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다. 천연자원 및 수산자원의 공동개발과 같은 자원부문의 협력사업은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남북경협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경협분야이다. 또한 천연자원의 공동개발은 북한에게 에너지난 타개 및 외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남한에게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대외의존도 감소 등과 같은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이다.

북한지역에는 마그네사이트, 금, 은, 아연, 니켈, 철, 석회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광물자원의 70% 이상, 철광은 90% 이상이 한반도의 북쪽지역에 편중되어 매장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지하자원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이 매장량 대비 생산량의 비율이 낮은 것은 북한의 자원 개발이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재정

#### (1) 국제금융기구 가입 추진

한국 정부 주도하에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 국제기구 가입 지원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일본 등과의 외교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세계은행을 활용하여 북한 경제관료, 기업인 및 지식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계은행과의 협의하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전에 대북지원

신탁기금 설치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은행 집행부, 미국, 일본 등과 협의하여 6자회담 참가국과 EU 등의 출연금 및 세계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대북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표 V-3> 세계은행의 비회원국 특별신탁기금 운용 사례

지 역	인 구	GNI	조성규모	시기
팔레스타인	3백만명	61억 달러	7.0억 달러	1993
보스니아	3백만명	95억 달러	1.5억 달러	1996
코소보	2백만명	26억 달러	0.8억 달러	1999
동티모르	1백만명	7억 달러	1.7억 달러	1999
이라크	28백만명	211억 달러	4억 달러	2004

### (2)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

남북협력기금을 현재의 증가추세(연평균 8% 수준의 증가)를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140~50억 달러 수준을 조성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이나 일본의 청구자금 등이 도입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협력기금을 대북 개발지원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2단계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정투입 필요성이 큰 대북 경협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존의 긴급 구호성 지원사업을 대북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농업기반시설 구축 협력사업으로, 의약품 지원을 병원 및 제약공장 투자협력 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민간의 대북투자 확대

북한 개발에 필요한 재정확보의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가 민간부문의 대북투자 확대이다. 우리 기업들은 저임노동력 확보 및 비용절약 등을 이유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에 진출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개선 및 투자리스크

축소 등에 따라 대북 진출 기업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임금상승, 환경규제, 세제혜택 취소 등)로 대북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개성공단 1단계 분양시 높은 경쟁력으로 잘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경협사업 추진 및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개선 등이 2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한국기업들의 대북 진출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다. 인프라

### (1) 개성-신의주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지원

경협물자 육류수송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연계 확대 등을 위해 개성-평양-신의주 구간의 철도 및 도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동 사업은 남북한이 모두 이득을 보는 win-win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서라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신의주간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요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호응여부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약 400km 정도의 구간을 건설하는데, 기존 북한의 고속도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지원

2단계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대북 전력송전, 북한 발전소 설비 개보수, 신규 발전소 건설, 발전용 연료공급 탄광 개발 등이다.

우선, 지난 2005년 9·19 성명발표 당시 이미 고려되었던 200만kw의 대북 송전방안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할 경우 관련국 간의 공동분담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단기적으로 송배전망 구축과 전기지원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로서는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북한 발전소 설비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과 적절한 자금회수 방안을 설계한 이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개보수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도 가능하다.

남북자원공동 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석탄광산 개발이나 증산을 통해 발전용 에너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북한 에너지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

### (3) 해주항 및 원산항 현대화

개성공단-해주의 연계발전을 위해 해주항의 현대화와 함께, 동해안 거점항으로서 원산항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수출가공구로서 개성-해주특구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이나 단지 내 기반시설 외에 항만시설의 개보수, 철도 및 도로 등 외부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이다. 해주항이 수출항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준설과 기존 부두의 개축, 다목적 부두 및 컨테이너 부두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두 전면 준설을 후 단계적으로 항로의 준설을 추진하고, 기본 부두의 개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목적 부두(1선석)와 컨테이너 부두(1선석)를 건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육로로 해주특구가 남측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및 교량 건설도 필요하다.

동해안의 최대 무역항인 원산항에 대한 현대화도 매우 중요하다. 안변지역의 조선산업에 대해 남북한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원산항이 일본과의 교역거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원산항의 정비를 위해서는 현재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 접안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하며,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두 1개 선석 개발 필요하며, 원산항 배후 철도·도로망의 확충도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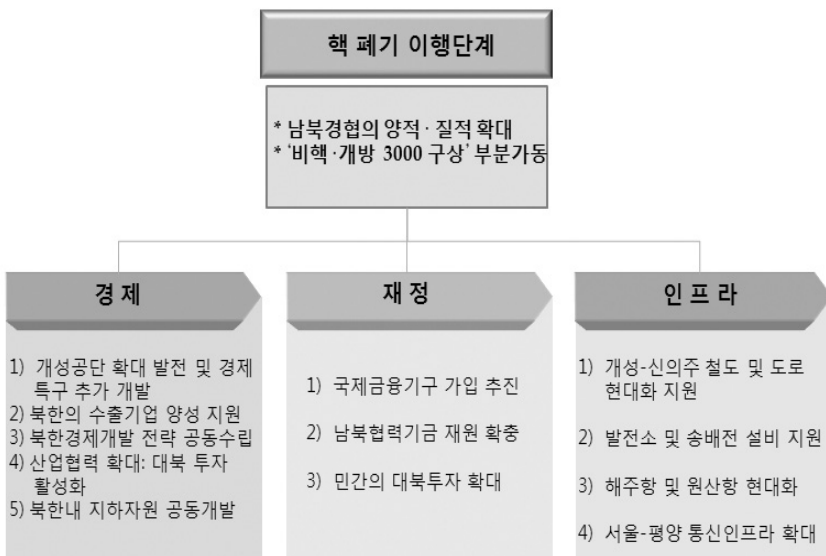
### (4) 서울-평양 통신인프라 확대

2000년 8월 서울과 평양을 잇는 광통신망이 구축되어 전화 300회선, TV(45Mbps급) 1회선, 데이터 통신(문서·음성·영상) 5회선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02년 9월 25일 경의선 남북 공사현장간 통신선이 연결되었다. 이후 동해지구 쌍방 공사현장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2003년 12월 5일 유선통신 2회선을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통신선 연결지점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 도로연결지점 동측으로 하고, 쌍방이 각기 군사분계선 후방 250m 지점에 단자함을 설치하여 단자함 사이를 통신케이블로 연결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개성공단지역과 남측을 연결하는 대규모 직접통신망 개통 등 남북경협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현재 통신망 하부구조에 대한 경험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경험사업 등과 관련하여 남북간의 통신망이 연결된 정도이다.

2단계의 목표는 우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대북 투자기업에 대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위한 1만 회선 규모의 개성공단 통신센터를 건설해야 한다. 이후 평양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평양간 유선통신망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설치, 운용된 이산가족상봉 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V-3> 제2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 3. 핵폐기 완료단계: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

3단계는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이 완전 가동됨으로써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공동체에 진입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북핵 폐기가 순조롭게 이행·실천된 단계로, 핵무기의 해체 및 핵물질의 반출 상황이 거의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상태에 진입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북, 일·북간 국교정상화가 추진되는 분위기 속에서, 동북아 안보협력회의가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로 제도화되고 남북한 군축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한 상황이다. 남북경협은 안정적인 제도화 수준에 이르렀고, 군사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제외한 북한 지역의 대부분이 개방되면서 남북한 합법적 왕래가 보장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비핵·개방·3000 구상’이 완전히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 가. 경제

##### (1)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중화학공업 및 첨단산업의 대북진출

3단계서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이를 북한 산업구조의 재편 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와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본격 추진하면서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등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이끌어 가야 한다. 북한의 소유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가격 개혁 등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북한 경제개발 전략을 한반도 경제통합 방향과 부합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국제사회의 대규모 대북 투자·지원을 유도하며,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패키지 사업을 완전 가동하여 민족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단계이다.

남북한 경제통합단계에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현재의 국가경제 및 산업 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경제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와 M&A, 원자재·자금·인력 등 경영자원의 “글로벌 소싱”을 통해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산업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상품개발, 생산시스템, 경영방식 등을 비롯한 모든 산업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동이 자유화되고 신기술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산업은 신기술을 융합하면서 새로운 산업 혁신을 이루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무역·투자·서비스의 자유화를 통해 지역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주변국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호 보완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역내 경제협력은 자유무역의 단계를 넘어서는 공동시장 출현을 목표로 환율 및 금융제도 협력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통합 움직임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남북한은 3단계에서 경제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양측이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경제적 보완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선진화와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합경제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의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경제통합의 초기 및 확대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된 정치·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세, 재정, 금융, 노동, 사회복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제부분에서 공동의 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 또한 경제전반의 개혁 및 개방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인구의 비농업부분 이동이 가속화 될 것이며, 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서 추진된 중화학 및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인력의 경공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동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통합의 인가 진전될수록 농업부분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및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산업입지와 주력 성장산업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진전과 동북아경제협력의 가속화로 교통·물류 인프라의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인프라 연결사업과 동북아시아의 운송·물류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로서 남한-북한-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의 지역경

제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프라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한과 인접한 개성과 남포·평양이 북한의 최대 산업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며, 북한의 폐쇄경제하에서 발전이 미약하였던 중국 및 러시아 변경도시(신의주, 만포, 나선, 청진)들이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특히 접경도시들은 남한 및 중국, 러시아 도시들과 하나의 소경제권 형성(개성-서울, 신의주-단동, 라선-연변-나호트카)을 통해 ▲ 자원의 공동이용, ▲ 외국인 투자 촉진, ▲ 규모의 경제실현, ▲ 분업구도의 형성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전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던 의류, 신발, 완구, 식품가공, 가전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북한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제조업부문 임금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사양화될 것이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중저가제품의 생산은 남북한 공동투자로 대부분 제3국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공정 개발과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기업은 고가품 위주로 국내생산을 추구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공업은 저가품의 해외생산, 중고급품의 북한지역 생산, 남한의 첨단 소재 공급, 상품개발 및 판매관리로 생산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의 산업구조 조정과 해외매각을 통해 기업의 경영·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생산설비가 현대화된 일부 중화학공업부문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철강, 시멘트, 건재, 비철금속 분야 등의 생산성이 크게 제고되어 남한의 첨단기술 위주의 산업구조와 보완적인 구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경제영역에까지 남북한간의 단일화가 진행되는 심화단계의 마지막 기간에는 남북한 산업의 영역구분이 무의미해짐으로서 전기·전자, 석유화학,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등의 모든 산업에서 남북한 생산공정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북한지역 생산이 활성화되어 남북한 산업의 유기적인 결합도가 단일경제권 수준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결국 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 북한지역에 입지하는 산업은 첨단기술부문에서 경공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게 되며, 특히 북한지역의 부존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대외수출이 유망한 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력 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sup>59)</sup>

## (2) 남북한 금융협력 확대

남북한 금융협력의 확대이다. 금융협력의 목표는 금융 및 결제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원활화와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sup>60)</sup> 이를 위해 금융 및 결제분야의 제도적 장치를 조기에 마련해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금융협력은 북한 금융분야의 개혁을 촉진시키고 북한의 외화난과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금융체제 개혁을 촉진시켜 남북한 금융체제의 차이를 줄여 나감으로써 금융협력 또는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하에 남북한 금융협력의 추진방향은 첫째, 물자교역 및 경협사업의 진전에 따라 금융 및 결제협력체제를 구축하되, 쌍방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금융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남북한 금융체제와 운용에 대한 이해와 동질적 요소를 증대시키고, 북한 금융분야의 개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sup>61)</sup>

금융협력은 경제공동체 형성 및 경제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단계적·체계적으로 북한금융부문의 대외개방과 체제개혁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남북경제공동체 협력 협정 체결

3단계에는 남북한이 경제공동체에 초기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이 시장경제와 경제적 효율성 및 국제적 규범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경제공동체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서울: 집문당, 2003), p. 95.

60) 김영윤,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89~91.

61) 북한의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이라는 점과 남북금융협력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한의 전담창구를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부금융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 중앙은행간 협의체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협력 협정’의 체결은 사실상 남북한이 국가연합의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재정

### (1)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차관 도입

3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이 확정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양허성 차관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이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도입이 가능한 자금규모는 연간 2~11억 달러(10년간 18~108억 달러)로 추정된다.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규모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출가용 재원과 북한에 대한 평가등급<sup>62)</sup>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대상기관은 세계은행, ADB, IMF 등이다. 세계은행은 양허성 자금(IDA)을 연간 최소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ADB도 양허성 자금(ADF)을 연간 최소 3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MF로부터는 용자(PRCF)를 연간 최소 1억 달러에서 2.9억 달러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대일본 청구자금 도입

3단계에서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으로 북일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에 따라 일본의 대북 지원금 및 ODA 자금이 도입되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의 대북 수교자금은 주로 ODA의 형태로 집행될 것인바, 앞서 기술한 대로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으로 나눌 것이다. 일본 ODA의 사례를 보면, 무상자금은 조건부(tied) 방식으로, 유상자금은 비조건부(untied) 방식으로 집행한다. 조건부 원조는 일본정부가 프로젝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로 일본기업에만 참가를 허용했다. 비조건부 원조는 자금을 수원국이 주로

62) 이는 해당 국제금융기관이 북한의 정책, 제도평가, 포트폴리오 실적 등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자국 기업에만 프로젝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왔으나, 한·일 청구권자금 집행에서는 이 또한 일본 국적을 가진 법인 내지 자연인에게 한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유상차관 프로젝트에의 입찰 참가자격을 자국 기업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표 V-4> 한일 수교자금에 기초한 북일 수교자금 추정

구 분		1965(A)	2006(B)	B/A
일본의 관련 경제지표	소비자물가	24.6	98.1	4.0
	환율(엔/달러)	360.8	116.3	0.3
	GDP 규모(10억엔)	32,750	507,810	15.5

한편, 일본의 대북 수교자금 규모는 한일 수교자금 및 최근 논의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07억 달러에서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일 수교당시 일본은 ODA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 금액을  $\Delta$ 일본의 물가상승률 및 환율 하락율을 반영하면 약 107억 달러(8억 달러 $\times$ 4.0/0.3)  $\Delta$ 일본의 GDP 증가율 반영 등을 고려하면 124억 달러(8억 달러 $\times$ 15.5)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수교자금 규모는 6자회담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적 보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많은 보상을 약속할 경우 이에 대한 지불이행 부담은 한국과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일본의 경우에는 수교자금에 일정부분 반영되어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해외직접투자 공동 유치

3단계에서는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지원 및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공동 투자유치단이 세계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IR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판 KOTRA'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 대북투자펀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대북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을 MIGA 및 IFC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MIGA는 대북 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인 정치적 위험에 대한 손실보증을 제공하며, IFC는 대북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및 용자를 제공한다.

#### 다. 인프라

##### (1) 남·북·러 전력망 연계 및 러시아 가스전 공동 개발

동북아 에너지협력 차원에서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남·북·러 간의 잉여전력 공동이용을 위한 연계전력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극동지역 가스전을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및 북한지역을 경과하는 가스파이프 라인 건설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북한내 도로 및 철도 현대화 지원 및 대륙과의 연계

북한내 기존 간선축의 긴급 복구를 통하여 접근성 강화 및 지역간, 교통수단간의 연계망을 확충하여 북한경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주요구간의 전면 재시공 및 중국,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경쟁력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 단계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북측 구간 활용, 남포항 등의 현대화, 물류단지 건설과 함께 물류 관련 인프라의 남북 표준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낙후된 북측 교통체계의 한계를 단기적으로 해소하여 한반도 국토공간의 균형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의 노후화, 교통 운영의 비효율화, 만성적인 수송난 극복을 위한 긴급 복구의 추진하고, 수송효율 극대화를 위한 복합운송의 활성화 유도(도로-철도-해상운송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남북한 단일수송로 구축도 필요하다. 도시입지 및 산업 배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중장기 한반도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동서축, 남북축, 중앙축, 순환축 등 유기적인 공간구조 연결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륙 교통망 및 동북아 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국제수송로를 구축해야 한다. 즉, 대륙철도망(TSR,

TCR, TMR, TMGR, ASEM철도) 및 아시아고속도로망(TAH)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로 구축이다.

### (3) 북한통신 현대화 지원

3단계에서는 북한의 대도시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통신망을 우선 확충하고, 통신망 현대화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까지 이동통신망 확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 추진할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 확충을 위해 남북경협에서는 남북간 통신분야의 표준화 및 일원화와 함께 대북사업장을 중심으로 통신망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우선, 대북사업장 통신망 구축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이다. 개성공단, 평양 등 대북진출 기업 북측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 또는 확충을 통해 대북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금강산 등 관광지구 통신망 구축을 통해 관광객 증대 및 편의 제공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남북 간 통신 표준화 및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통신 표준화와 통신망 연결을 통해 향후 통신 인프라의 통합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남측 및 기타 외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북한에 선진적 정보통신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내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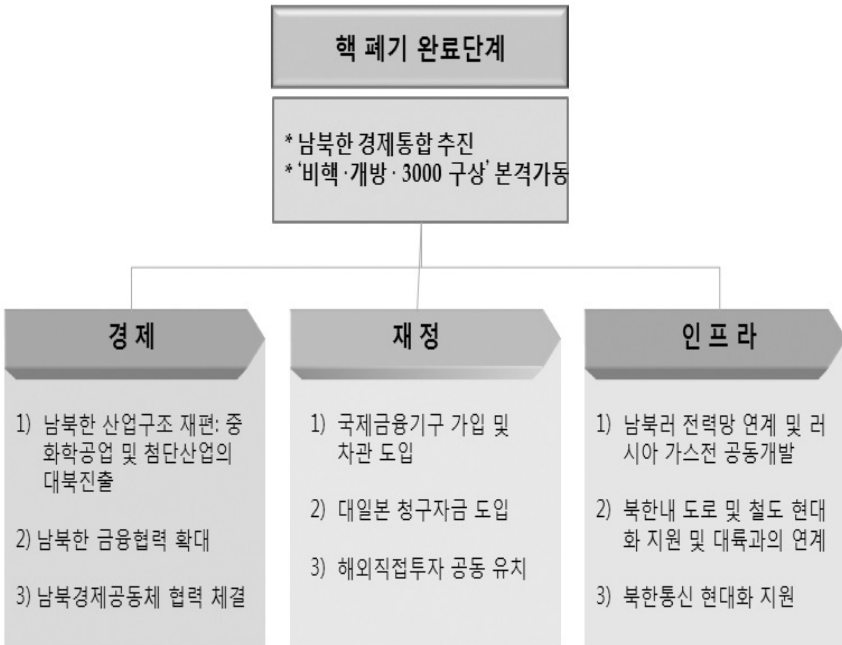
이를 위해, 첫째, 광업, 제조업, 관광 등 타 분야 경제협력과 연계해서 통신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통신 인프라 분야 협력은 별개의 독립적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주요 남북경협 사업과 연계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경협사업에 통신 협력을 연계할 경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협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상업적 방식으로 통신인프라 건설 및 운영해야 한다. 통신인프라 구축을 다른 경협사업과 연계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상업적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대북사업을 전개하는 민간기업이 해당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므로 통신요금 징수를 통해 건설 및 운영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셋째, 기술 교류·지원을 통한 통신 표준화의 추진이다. 기술 교류·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남북한 통신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에 북측 인력을 참가시켜 남북한 기술인력이 공동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기술전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그림 V-4> 참조).

<그림 V-4> 제3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북한 관계론』.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5.
- 김규륜 외.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김영운.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박순성.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박형중 외.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2.
- 윤대규·임을출 편저.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6.
-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서울: 집문당, 2003.
- 이석기 외.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2007.
- 이수훈 외. 『한반도경제 구상: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 동북아시아연구원회, 2006.
- 임강택·임성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임을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개입』.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정우진. 『에너지산업의 대북한 진출방안 연구』,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 정우진·박지민. 『대북 전력지원 및 협력방안 연구』.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08』, 2008.
-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각호.

- \_\_\_\_\_. 『통일백서』, 각년호.
- 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한국산업은행. 『신북한의 산업』, 2005.
- 한국은행.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9.
- \_\_\_\_\_.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 2004.
- 홍성국. 『평화경제론』. 서울: 다해, 2006.
- KOTRA.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2007.6.
- \_\_\_\_\_. 『북한대외무역동향』, 각년도.

- Balassa, B.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Allen & Unwin, 1961.
- Jovanović Miroslav 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 Myrdal, Gunnar.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6.
- Tinbergen, J..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Elsevier, 1954.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2008.

## 2. 논문

- KDI 북한경제팀. “2008년 남북경협에 관한 경협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KDI. 『북한경제리뷰』, 2008.7.
- 김규륜.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구도.” 『한독사회과학논총』. 14권 1호, 2004.
-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북한연구학회보』, 10권 제1호, 2005.
- 김영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수은 북한경제』, 2008년 봄호.
- \_\_\_\_\_.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



- 북한 통일과정.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4.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선.” 『경제연구』, 2003년 2호.
- 박명혁.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2003년 3호.
- 박찬봉.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외교』, 제86호, 2008.7
- 배종렬. “김정일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최소치와 최대치.” 『현대북한연구』, 11권 1호, 2008.
- 서우석. “통일 전 동서독의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토논단』, 231권, 2001.
- 심승진·김진. “수직적 지역경제통합과 구성국간 경제적 효과의 수렴·발산.” 『국제경제연구』, 8권 3호, 2002.
- 양문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권 2호, 2007.
- \_\_\_\_\_. “남북경협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경협정책.” 『KDI 북한경제 리뷰』, 2008.3.
- \_\_\_\_\_. “남북한 경제관계의 오늘과 내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북한 관계론』.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5.
- 윤덕민. “비핵·개방·3000 구상: 국제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KIEP 세미나 자료집, 2008.4.
- \_\_\_\_\_. “비핵·개방 3000 구상: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13.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 이석기.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발전계획.”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이영훈.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2005.
- 이종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구축 현황.”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임강택.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추진 방안.”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조 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2006.
- 최장호.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 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1권 3호, 2007.
- Badinger, Harald. “Growth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the case of the EU Member States(1950~2000).” *IEF Working Paper*. No. 40, 2001.
- Baldwin, R. E.. “On the Measurement of Dynamic Effects of Integration.” *Empirica*. Vol. 20. No. 2, 1993.
- Cohen, Jeffrey P. and Catherine Morrison Paul. “Production Externalities, Integration and Growth: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Single Market’.” Harry Bloch. ed.,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Global Economy*. Cheltenham: Edward Elgar Press, 2003.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초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저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저	20,000원
2009-16	200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 '비핵·개방·3000 구상'을 위한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7,5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01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공저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저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저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저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